

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2026 February vol. 110

똑똑한 재정지출 공공투자의 가치

“똑똑한 공공투자가
새로운 미래를 움직입니다”



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2026 February

vol. 110



똑똑한 공공투자가 새로운 미래를 움직입니다

공공투자는 단순한 재정지출이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미래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월간 나라재정 2월호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공투자의 방향을 함께 살펴 보고자 합니다.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2288-6200

홈페이지 www.fis.kr

발행인 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혁신본부 재정정보분석부 | 02-6908-8634

기획·디자인·인쇄

디자인한 | 02-426-6810

재정
NOW

04

재정 칼럼

미래를 위한 합리적 선택, '공공투자'란 무엇인가?

- 안종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공공투자 성과 평가의 중요성과 개편 방향

-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16

숫자로 보는 재정동향

2025년 11~12월 기준 재정동향

24

이달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30

해외재정동향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42

재정캘린더



10



재정 NAVIGATION

- 44**
재정제도 이야기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주요 쟁점과 동향
- 50**
재정이 MONEY
2026년 국내외 경제전망과 돈의 대이동
- 54**
역사 속의 재정관리 이야기
조선의 재정 운용을 이끈 학문, 산학(算學)
- 58**
남산 동상, 그 역사 속으로
백범 김구, 자주독립을 떠받친
나라살림의 원칙

FIS 재정

- 62**
이탈의 재정경제 도서
- 64**
재정원 소식
- 66**
애독자 코너

미래를 위한 합리적 선택, '공공투자'란 무엇인가?

안종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센터장)



도로·철도·학교·기반시설
우리 삶을 뒷받침하는
공공투자



공공투자 자원
조달 다변화



타당성 조사·성과관리로
공공투자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



미래를 위한
사회적 선택, 공공투자는
재정의 핵심 수단



1. 국가의 생존전략, 공공투자

우리는 매일 공공투자의 결과물을 이용하며 살고 있다. 출퇴근길에 이용하는 도로와 철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시설,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상하수도 시설까지 모두 공공투자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병원과 공공 의료, 재난을 막는 제방과 댐, 디지털 행정시스템과 통신망도 모두 마찬가지다. 이러한 시설은 한 번 만들어지면 수십 년 넘게 우리의 행복한 삶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정작 공공투자라는 말은 조금 낯설게 다가온다. 정부 예산으로 하는 일이라면 모두 ‘지출’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세금을 쓰는 행위는 곧 비용으로 인식된다. 실제로 복지 급여나 인건비처럼 당장의 필요를 위해 소모되는 예산도 존재한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시설 등에 들어가는 재정지출은 자산을 남긴다는 점에서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경상지출과 구분하여 ‘공공투자’라 부르는 것이다.

공공투자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공투자의 핵심은 ‘현재의 소비를 일부 희생하여, 미래 기간에 걸쳐 더 큰 편익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정자산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를 건설하면 건설비는 한 번에 ‘지출’된다. 그러나 그 도로는 수십 년 동안 물류비를 절감하고 이동 시간을 단축하며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편익으로, 초기 비용이 많은 대신 시간이 흐르면서 더 큰 편익이 축적된다. 바로 이 점이 공공투자가 ‘지출’이나 ‘소비’가 아니라 ‘투자’로 불리는 이유다.

경제학적으로 보아도 공공투자는 자본 형성에



해당한다. 민간기업이 공장을 짓는 것이 투자이듯, 정부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도 사회 전체의 자본을 늘리는 행위다. 차이는 소유와 목적에 있다. 민간투자가 이윤을 목적으로 한다면, 공공투자는 공공의 편익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정부 재정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지출은 증가하고, 경기 둔화 및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세수는 불안정하다.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전환, 지역균형발전 등 새로운 정책 수요도 늘고 있다. 재정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투자 수요도 확대되는 상황으로, 소위 ‘재정여력’이 줄어드는 구조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중단할 수는 없다.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병원과 학교 같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 같은 미래 인프라는 국가 경쟁력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 분야는 초기 투자비가 막대하지만,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공투자의 역할이 다시 강조된다.

재정 여건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최근

발표된 “2026년 예산안(총지출 727.9조 원, 전년 대비 8.1% 증가)¹⁾”을 통해 ‘공공투자 재원조달의 다변화’와 ‘적극적 재정 운용’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투자는 국가의 미래 생존전략으로 재정의되는 중이라고도 할 수 있다.

II. 공공투자 재원조달 방식의 변화와 민간투자사업

문제는 공공투자에 필요한 ‘돈’인데,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51.6%(2026년 전망)를 상회하는 형편에 무작정 세금으로만 모든 사업을 밀어붙일 수는 없다. 따라서 민간의 자본과 창의적인 기술력을 공공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재원조달 다변화’를 필요로 하게 된다.

공공투자의 재원조달 방식은 다양화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방식이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즉 ‘민간투자사업’이다. 이는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다. 민간이 자금을 조달하고 시설을 건설·운영하며, 정부는 장기간에 걸쳐 사용료 지급이나 운영수입 보장 등의 방식으로 비용을 분담한다.

1. 2026년 총 지출은 727.9조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다.



이를 통해 초기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필요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민간투자사업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익형인 BTO(Build-Transfer-Operate)와 임대형인 BTL(Build-Transfer-Lease)이다. 수익형(BTO)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관리운영권(사용수익권)을 받아 일정 기간 직접 운영하며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민자고속도로처럼 이용자가 낸 돈(통행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적다. 임대형(BTL)은 건설 후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관리운영권을 획득하는 과정까지는 같으나, 정부가 그 시설을 빌려 쓰면서 민간에 임대료(시설임차 및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주로 학교 기숙사, 군 관사, 공공 도서관처럼 이용자에게 직접 요금을 받기 어려운 시설에 활용된다. 용어는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누가 자금을 먼저 부담하고, 누가 운영하며, 소유권이 언제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의 차이다. 이는 결국 재정부담의 시점과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의 차이로 볼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정부가 민간과 손을 잡는 이유는 명확하다. 당장 수조 원의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을 즉시 착수할 수 있다. 재정투자사업을 통해서만 10년 뒤에나 가질 수 있었던 도로를 5년 만에 완공하여 국민들이 더 일찍 편리함을 누리게 하는 것인데, 예산 확보 절차가 복잡한 재정사업에 비해 의사결정이 빨라져 필요한 시기에 시설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전문 기업이 운영할 때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되거나 혁신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도 많다. 정부 재정이 부족



한 상황에서 투자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경기 침체기에도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를 지닌다.

물론 민간투자사업에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며, 단점도 분명하다. 초기 재정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정부가 지급해야 할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잠재적 외상’으로, 미래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익형에서는 민간 참여자가 이윤을 남겨야 하므로, 재정 사업보다 사용료가 비싸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임대형에서도 당장은 돈이 안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20~30년간 정부가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야 하므로 미래 예산의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게 된다. 또한 계약 구조가 복잡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예상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때(예: 이용자 저조) 누가 책임을 지느냐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Ⅲ. 전통적 공공투자와는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자금 흐름

공공투자는 도로, 철도, 학교 등 자산(시설)을 만들어 오랫동안 사회적 서비스를 창출하는 지출이고, 일반 재정지출은 임금, 복지급여, 운영비, 이자 등 그 해 소진되는 비용이 많다. 공공투자는 초기 지출이 크지만 장기 편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시간 구조가 다르고,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먼저 돈을 내고(투자) 나중에 어떻게 갚는지(상환·운영)가 정책의 핵심이 된다. 공공투자를 정부가 직접하면(재정 사업) 예산에 자본지출이 먼저 나타나고,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면 민간이 선투자하고 정부 또는 이용자가 장기간에 걸쳐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가 된다.

재정 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차이는 자금 흐름에서 분명해진다. 재정 사업에서는 정부가 직접 차입(국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고, 공사를 발주해 건설한 뒤 유지·관리까지 책임진다. 비용은



즉시 재정에 반영되고, 명시적인 채무가 예산이나 통계에도 비교적 직접적으로 기록된다. 반면 민간투자사업에서는 민간이 먼저 자금을 조달하고, 정부는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임대료나 운영보조금 등의 비용을 지불한다. 거기에 재협상, 분쟁 등까지 포함하면 그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다. 표면적으로는 재정지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기적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민간투자사업은 계약 체결 시점이나 건설 기간에 '부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운영 기간의 사용료, 운영보조금, 수요보전, 해지지급금 등 미래의무를 만들어 중장기 재정계획의 경직성을 키울 수 있다. 지출을 가림으로써 정부 부채와 유사하게 재정의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위험을 식별 및 계량화한 후 공개하고 재정위험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회계상 처리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 부담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예산상의 지출만으로는 실질 부담을 과소평가하기 쉬우므로, 중장기 재정계획에 이러한 장기 지급의무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자산과 부채를 적절히 인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공투자의 건전성은 단기 적자 여부가 아니라 장기 지속가능성에 달려 있다. 결국 공공투자는 '누가 언제 부담하느냐'의 문제로, 정부가 직접 빚을 내어 지금 부담할 것인지, 민간이 먼저 투자하고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분담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이 선택은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만약 공공투자가 미래세대에게도 편익을 제공한다면, 일정 부분 미래 세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편익이 단기적이거나 효율성이 낮다면 이는 부담의 일방적 전가에 불과하다.

국가의 생존전략으로도 볼 수 있는 공공투자는 단순히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다.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성과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IV. 공공투자,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선택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투자는 당장의 세금 인상 여부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 투자기 때문이다. 신속한 교통망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산업의 토대가 된다. 질 높은 학교와 병원은 인적 자원을 축적한다. 디지털 인프라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한다. 이러한 자산은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의 자산이다. 공공투자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도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연구개발 투자, 인재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무형의 자산도 포함된다. 미래 산업의 경쟁력은 이러한 무형 자산에 의해 좌우된다.

공공투자를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집을 살 때 활용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비유하는 것이다. 우리가 집을 살 때 거액의 현금을 한 번에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출을 받아 집을 먼저 사고, 그 집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면서 매달 원리금을 조금씩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만약 돈을 다 모아서 집을 사려 한다면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거나, 집을 살 때쯤이면 이미 집의 효용이 떨어진 이후가 될 것이다. 공공투자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철도나 병원을 20년 동안 세금을 모아 짓는다면, 그 20년 동안 국민들은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투자를 통해 미래에 누릴 편익을 현재로 앞당겨 줄 수 있다면,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공공투자는 국민 부담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부담의 시점과 구조를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가 직접 빚을 내든, 민간이 선투자 후 장기 지급 구조를 취하든, 궁극적으로 비용은 사회 전체가 부담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비용이 미래 편익을 창출하는지의 여부다.

적극재정 기조 속에서 공공투자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규모의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교한 설계(예비타당성조사), 합리적 위험 분담(집행 효율성), 엄격한 성과 관리(성과 평가 및 환류 체계), 세대 간 형평성 고려(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의 정합성)가 병행될 때 공공투자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가 된다.

재정은 단순한 지출의 총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사회적 선택이며, 공공투자는 그 선택의 핵심 수단이다. 우리가 오늘의 비용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성장과 삶의 질은 달라질 것이다. 지금의 투자가 미래 세대에게 빛이 아닌 ‘수익성 높은 자산’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나 AI 인프라가 바로 그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 공공투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확신으로 바뀌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오늘 뿌린 이 공공투자의 씨앗은 반드시 내일의 풍요로운 결실로 돌아올 것이라 확신한다.



공공투자 성과 평가의 중요성과 개편 방향

성과 중심 재정운용 체계로의 전환과 제도 혁신 과제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정부투자분석센터 센터장)



'얼마를 썼는가'보다
'얼마나 나아졌는가'
성과 중심 평가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전환과
정책 효과 중심 평가 강화



2026년 성과 평가,
실질적 재정운용 도구로
구조적 전환



과학화·투명성 강화로
똑똑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재정 실현



I. 서론

공공투자는 국가 재정의 핵심 기능이자 미래 전략의 구현 수단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복지·보건, 교육, 고용, 연구개발(R&D), 디지털 인프라 등은 단순한 예산 집행 사업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과 국가 장기 성장잠재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투자다. 이러한 공공투자는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는 오랫동안 집행률, 공정률, 예산 소진 여부 등 관리지표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지표는 행정적 책무성과 집행 통제 측면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정책의 궁극적 목적 ‘교통 혼잡 완화, 안전사고 감소, 소득 및 고용 개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최종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했더라도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사업을 성공이라 평가할 수 없다. 공공투자는 ‘얼마를 썼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얼마나 나아졌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최근 재정 여건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 의무지출 증가, 미래 대비 투자 확대, 저성장에 따른 세수 기반 약화는 재정 운용의 제약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과 평가는 단순한 사후 점검을 넘어 전략적 자원 배분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 도구로 기능해야 한다. 한정된 재원을 가장 가치 있는 분야에 배분하기 위해서는 성과 없는 사업을 과감히 조정하고, 효과가 입증된 사업에 집중하는 체계가 필수적이다.



II. 성과 평가의 국제적 기준과 국내 동향

국제적으로 공공투자 성과관리는 개별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넘어 제도적 거버넌스 수준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IMF의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Assessment(PIMA)는 공공투자 관리체계를 기획-선정-집행-사후평가 전 주기에서 진단하며, 법·제도적 틀, 조직 역량, 정보체계, 사후관리 구조 등 다양한 요소가 투자 효율성을 좌우함을 강조한다.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다. 공공투자의 성과는 단지 사업 설계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와 제도적 기반의 문제라는 점이다. 전 주기 관리체계가 일관되게 작동할 때 비로소 투자 효율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

미국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제도는 성과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직접 연계하려는 시도였으며, 유럽의 CAF(Common Assessment Framework)는 공공기관 조직 전반

을 전략·리더십·과정·성과 관점에서 종합 진단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성과 평가가 지표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예산 결정과 조직 운영체계 개선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공공부문 성과관리에 대한 제도적·학술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여러 차례 개편을 거치며 개선을 모색해 왔고, 기관 특성과 사업 유형에 따른 맞춤형 평가체계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단순 성과지표 측정에서 벗어나 성과 감독(performance monitoring)과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를 결합한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관리 중심 평가에서 정책 효과 중심 평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Ⅲ. 국내 성과관리의 구조적 한계

이원화된 평가 구조의 한계

기존 재정사업 성과 평가는 부처 자체평가와 재정 당국 점검이라는 이원화 구조로 운영되어왔다. 이러한 체계는 평가의 객관성과 엄정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체 평가 중심 구조에서는 평가 긴장도가 낮아질 수 있고, 평가 결과가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 시범사업의 이해충돌 구조

복지 분야 시범사업의 경우, 사업부처가 설계·집행뿐 아니라 성과 평가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구조가 반복되어왔다. 이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내포하며,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어렵게 만든다.





데이터 비공개와 검증의 한계

시범사업 과정에서 축적된 행정데이터가 외부 또는 중립적 평가기관에 공개되지 않는 관행도 문제다. 데이터 접근이 제한되면 정책 효과의 인과적 검증과 재현 가능성 확보가 어렵다.

정책실험은 성공뿐 아니라 실패 또한 학습 자산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 비공개는 정책 학습의 선순환 구조를 차단한다. 따라서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관리·공유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비식별화된 행정데이터를 독립기관에 제공하는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IV.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개편의 전환적 의미

최근에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을 제시하였다.

첫째, 통합 재정사업 성과 평가 체계를 도입하였다.

기존의 이원화된 구조를 관계부처 합동·외부 전문가 중심 체계로 일원화하여, 세부사업 단위의 필요성, 집행 적정성, 재정지원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설계하였다.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평가의 민주적 정당성도 강화하였다. 둘째,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직접 연계하였다. ‘정상추진·사업개선·감액·폐지·통합’ 등 명확한 유형으로 평가 결과를 구분하고, 성과 부실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액 또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우수 사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성과 제고를 유도하였다.

셋째, 심층평가와 장기 추적평가를 강화하고, AI 기반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는 단기 집행 성과를 넘어 중장기적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다.

이번 개편은 성과 평가를 형식적 절차에서 벗어나 실질적 재정운용 도구로 전환하려는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V. 시범사업 평가의 과학화: 정책실험의 제도적 정립

성과 중심 재정운용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본사업 이전 단계에서 정책 효과를 엄밀히 검증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특히 복지·소득 이전 사업과 같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시범사업 단계에서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은 다음과 같은 설계 원칙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정책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집단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단순한 지역 선행 시행이 아니라, 인과효과를 식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성과지표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정책 추진 이후에 지표를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평가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셋째,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표본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 표본 규모가 부족하여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면, 해당 시범사업은 정책 결정의 근거로 활용되기 어렵다.

넷째, 무작위 배정은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배정 과정에 개입할 경우 선택 편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전 분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요 결과 변수, 분석 모형, 포함·제외 기준 등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마이닝과 사후적 자의적 해석을 방지할 수 있다.

여섯째, 시범사업 결과는 본사업 설계와 예비타당성조사에 구조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시범사업과 본사업이 단절되지 않고 단계적으로 연결되는 환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형식적 시범사업은 오히려 정책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과학적 설계와 엄격한 기준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시범사업은 정책 학습과 개선의 실질적 도구로 기능한다.

VI. 향후 제도 개편 방향

앞으로 성과 평가 체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첫째, 설계와 평가 기능의 독립성을 제도화해야 한다. 정책을 설계·집행하는 주체와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 간의 역할 분리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

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데이터의 공개와 외부 검증을 제도화해야 한다.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외부 연구자와 평가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효과 검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평가 결과의 환류를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평가가 예산 편성과 본사업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구속력을 갖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책 실험의 실패를 학습 자산으로 인정하는 행정문화의 전환도 필요하다.

VII. 결론: 성과로 증명되는 공공투자

공공투자 성과 평가는 더 이상 집행관리의 보조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재정의 전략적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기제다.

성과는 숫자가 아니라 변화로 증명되어야 한다. 집행률이 아니라 교통혼잡 완화, 안전 개선, 소득 증가,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최종 성과가 평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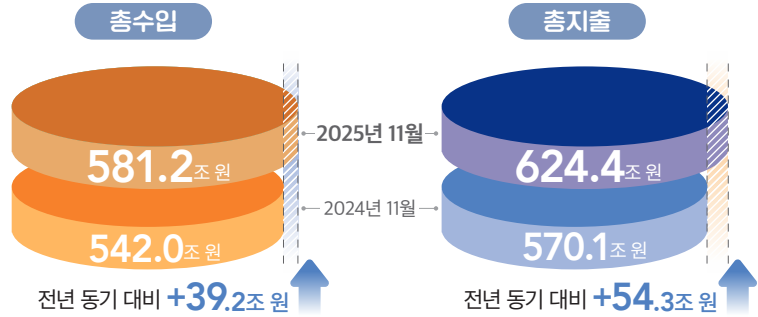
성과 평가가 ‘얼마를 썼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나아졌는가’를 묻는 체계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똑똑한 재정지출과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이 실현될 것이다.



재정동향

2025년 11월(일부)·12월(누계) 기준*

총수입·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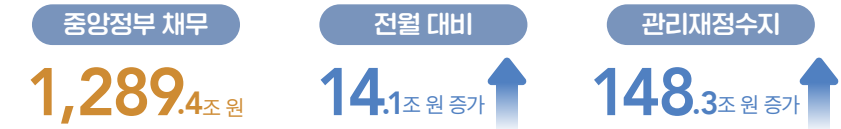


재정수지



-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3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2.

국가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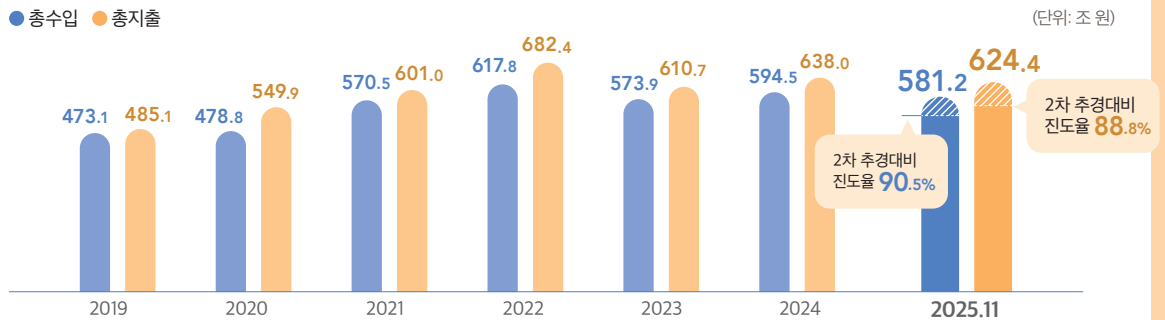
- 주 1 2024년까지는 결산, 2025년은 집행 기준
 2 중앙정부 채무 기준
 3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5→2020년 기준년 개편) 반영
 4 구성항목별 수지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2.

국고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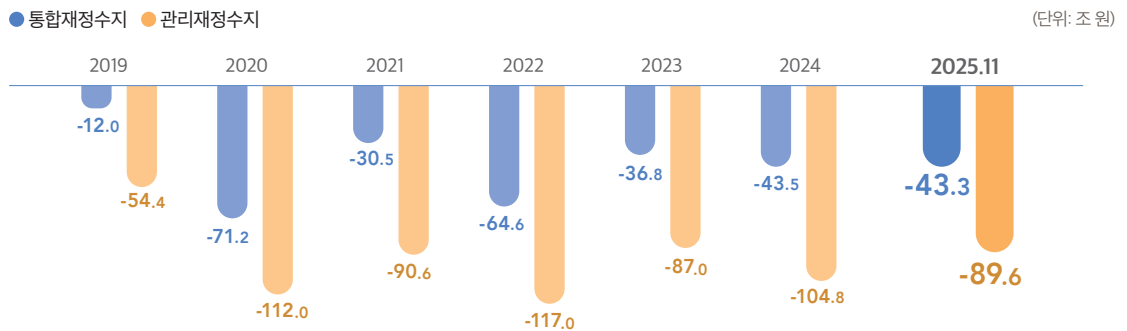


- 주 1 개인투자용 국채 0.1조 원 포함시 18.0조 원
 2 26년도 본예산 국고채 발행 한도액 225.7조 원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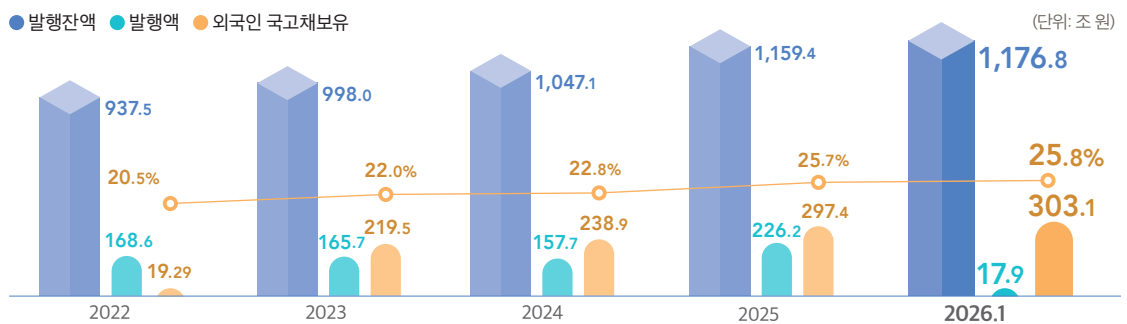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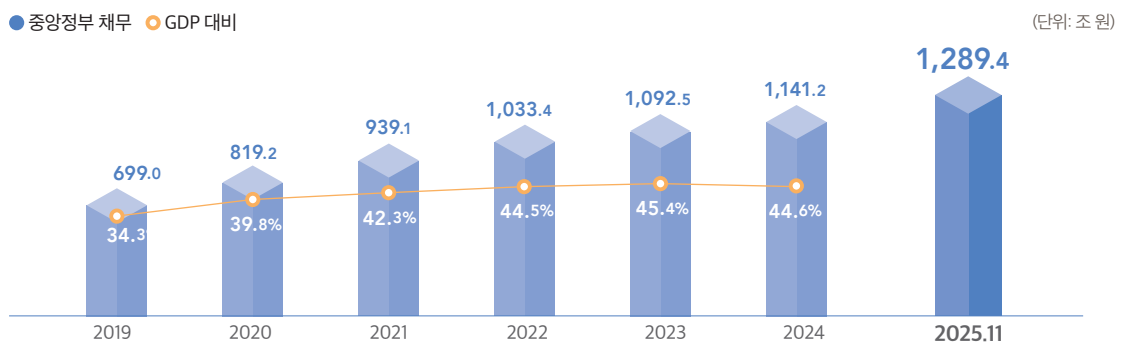
* 25년 말 기준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 예정



※ 2024년까지는 결산, 2025년은 2차 추경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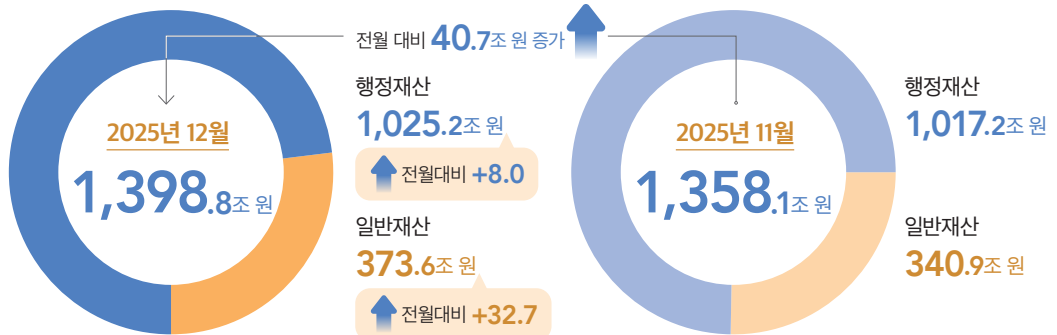
※ 2024년까지는 결산, 2025년은 2차 추경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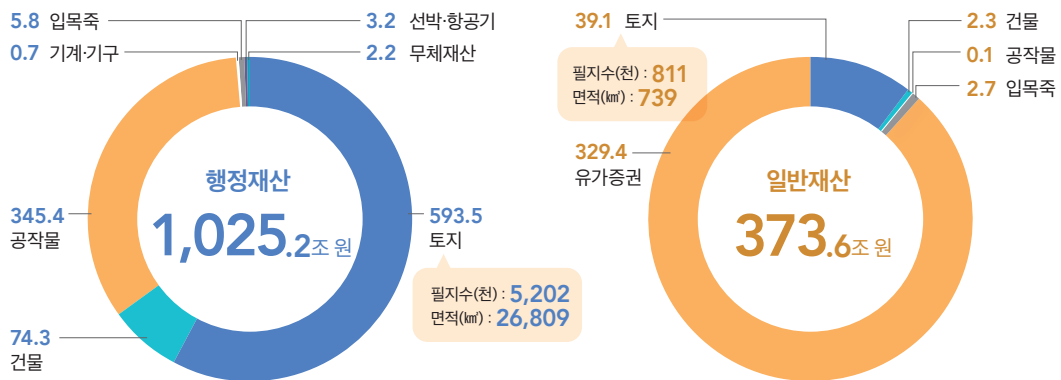
※ 2024년까지는 결산, 2025년은 2차 추경기준

국유재산

국유재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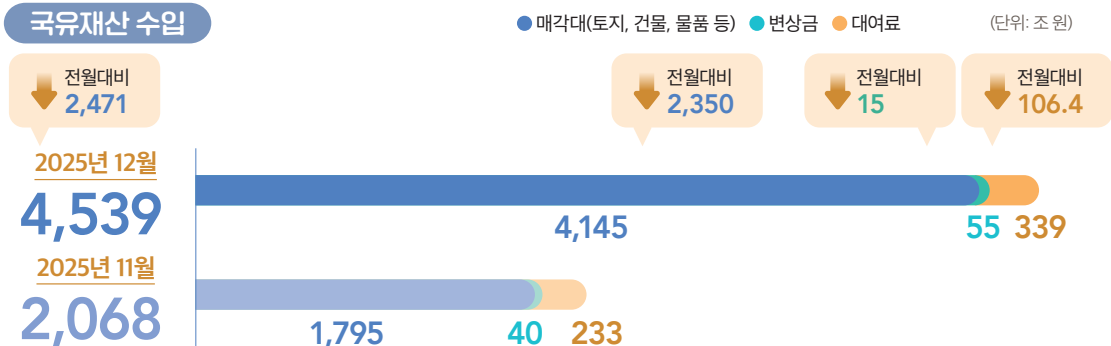


- 주 1 행정재산: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예시: 청·관사, 도로, 하천 등)
 2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2.



- 주 1 2024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2025년 자료는 잠정
 2 d-Brain 자료 및 dBrain+를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를 합산하여 최종 값을 도출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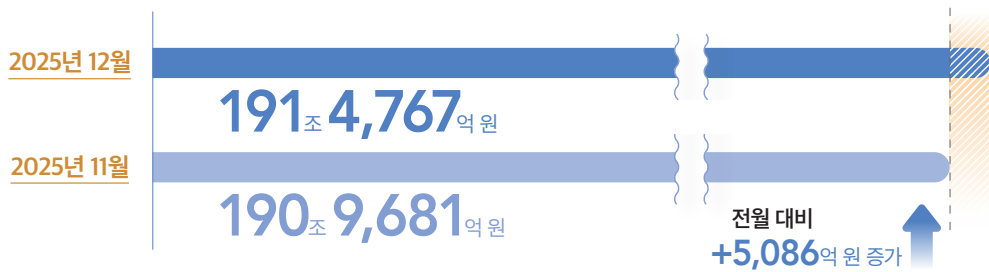
국유재산 수입



- 주 1 매각대: 토지, 건물, 기계기구, 입목죽, 무형자산, 내용연수 1년 이상의 완성재, 양곡, 원자재, 유동자산 등 매각 수입
 변상금: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에 수납한 변상금 대여료: 토지, 건물, 기타 관유물 대여료
 2 2024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2025년 자료는 잠정
 3 dBrain 자료 및 dBrain+를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2.

정부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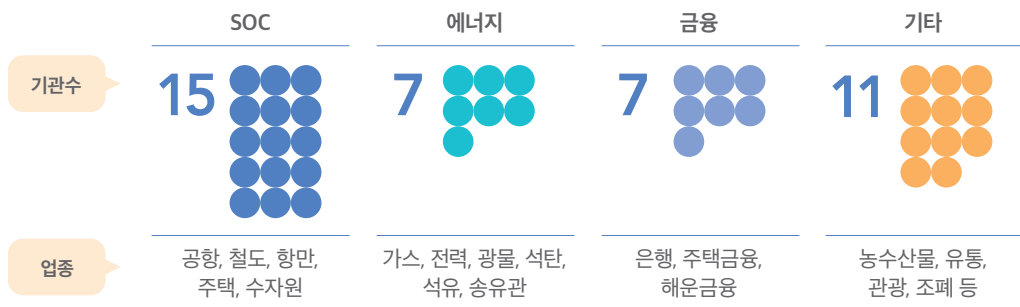
정부출자금



대상기관

SOC, 에너지, 금융 등 공공업무 수행 40개 기관

(단위: 개)



출자금 세부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 외

(단위: 억 원)

2025년 12월

일반회계

870,986억 원

특별회계·기금

1,043,780억 원

191조 4,767억 원

318,308

74,502

475,595

2,581

985,371

6,066

50,732 1,611

2025년 11월

일반회계

870,860억 원

특별회계·기금

1,038,785억 원

190조 9,681억 원

318,217

74,502

475,560

2,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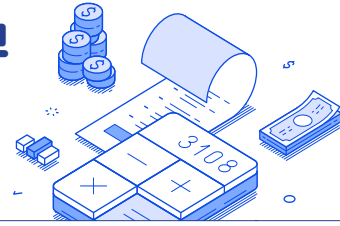
980,376

6,066

50,732 1,611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2.

2025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일반·특별회계)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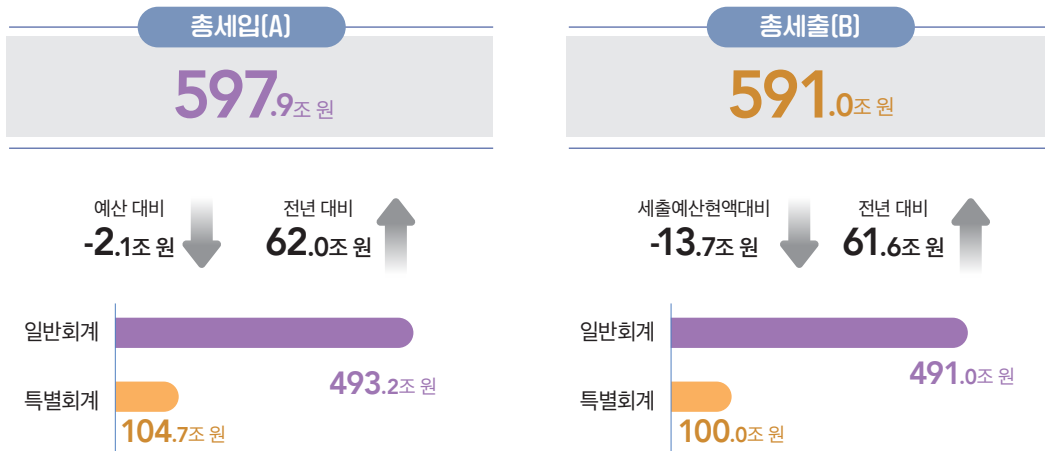


- 재정경제부는 2월 10일(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
- 마감 결과, 총세입 597.9조 원, 총세출 591.0조 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6.9조 원, 이월액 3.7조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2조 원으로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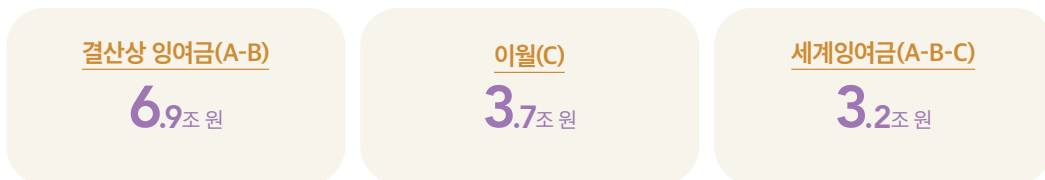
*2025회계연도는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 규모를 초과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 집행률이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남

- 총세입은 597.9조 원을 징수하여, 예산(600.0조 원) 대비 2.1조원 감소,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73.9조 원, 세외수입은 224.0조 원
- 총세출은 예산현액 604.7조 원 중 591.0조 원을 집행, 세출예산 집행률은 97.7%로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남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결과



주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이하 동일)



총세입

※ 2025회계연도 기준

총세입

597.9조 원



예산 대비 -2.1조 원

전년 대비 62.0조 원

국세수입
373.9조 원예산 대비
1.8조 원전년 대비
37.4조 원세외수입
224.0조 원예산 대비
-3.9조 원전년 대비
24.6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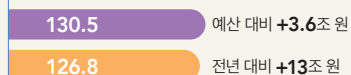
● 결산 ● 예산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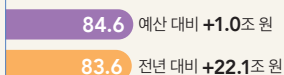
총국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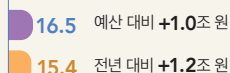
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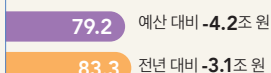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2025회계연도 총세입 현황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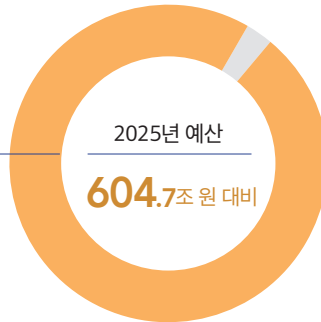
구 분	2024년 실적(A)	2025년		예산대비(C-B)	전년대비(C-A)
		예산(B)	실적(C)		
합계	535.9	600.0	597.9	-2.1	62.0
국세수입	336.5	372.1	373.9	1.8	37.4
세외수입	199.4	227.9	224.0	-3.9	24.6

총세출

※ 2025회계연도 기준

총세출

591.0조 원



집행률 97.7%

전년 대비 61.6조 원 ↑

2025회계연도 총세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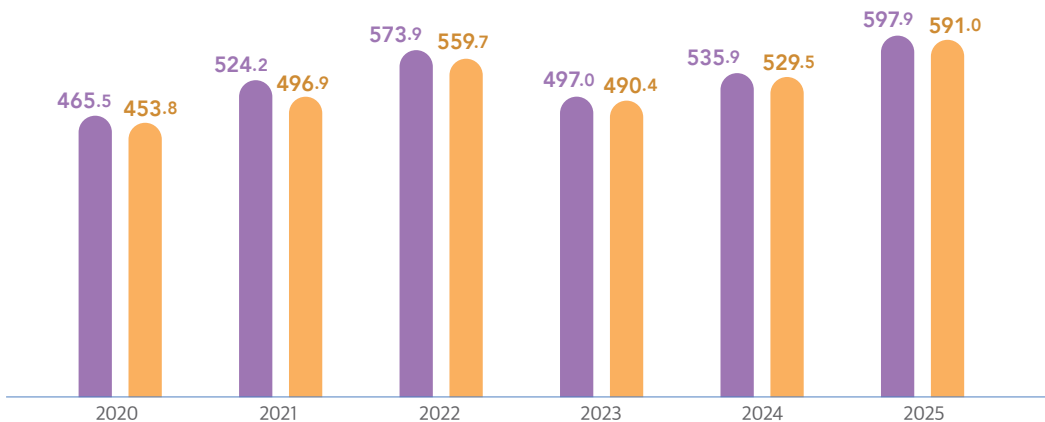
(단위: 조 원)

구 분	2024년 실적(A)	2025년		현액대비(C-B)	전년대비(C-A)
		예산현액(B)	지출액(C)		
합계	529.5	604.7	591.0	-13.7	61.6
일반회계	435.4	498.4	491.0	-7.4	55.6
특별회계	94.0	106.3	100.0	-6.3	6.0

최근 5년 세입·세출 마감 현황

● 세입 ● 세출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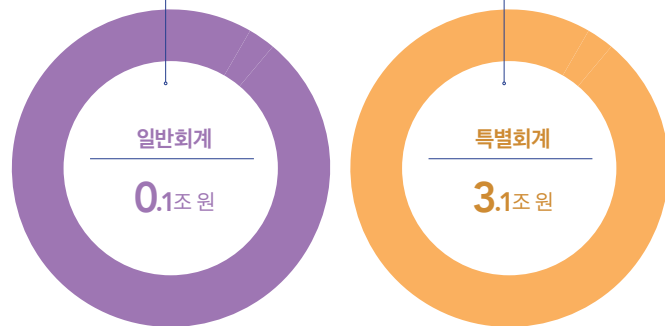


세계잉여금

※ 2025회계연도 기준

세계잉여금

3.2조 원



세계잉여금의 처리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4월 중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처리

지방교부세
정산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잔여액 30% 이상)채무상환
(잔여액 30% 이상)이후 잔액은 세입 이입
또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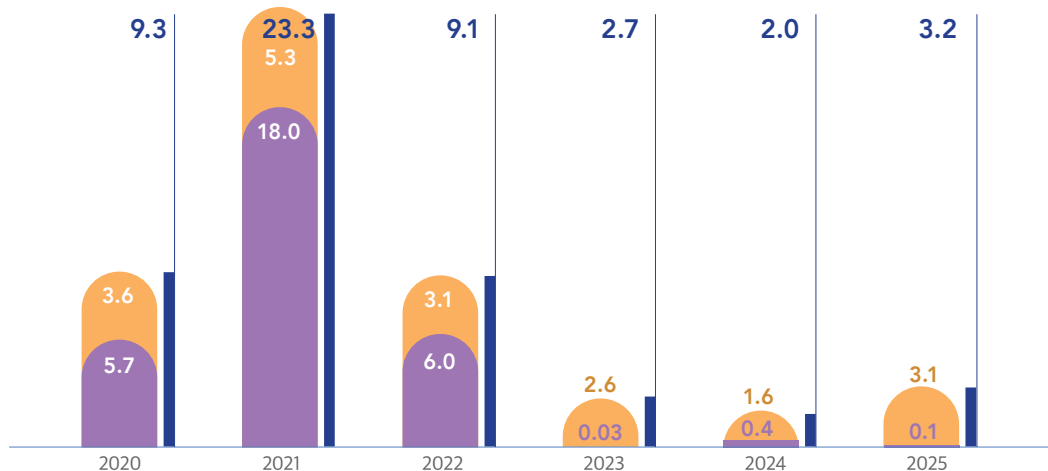
-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 따라 자체 세입조치 예정

*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에서 차년도 이월액 등을 차감한 수치)

최근 5년 세계잉여금 규모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조 원)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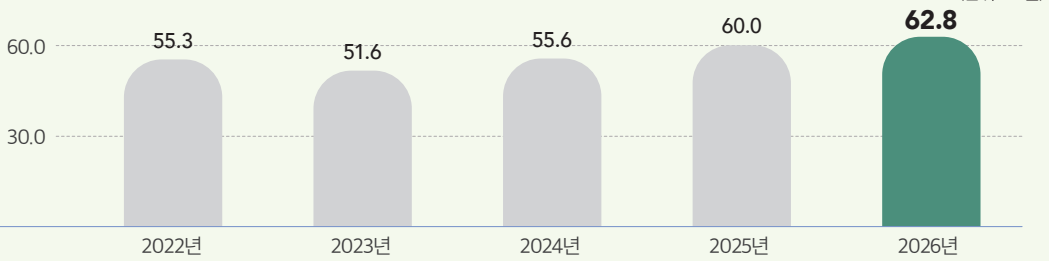
2월호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성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토교통부

임무: 풍요롭고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하고, 포용적 주거복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며,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는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물류 체계를 구축하여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비전: 살기좋은 국토·도시 환경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고, 국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국민의 신망을 받는 일류 부처로 도약한다.

총지출 추이



주 2024년까지는 결산, 2025~2026년은 본예산 기준

총지출 62.8조 원 중 성과관리대상 58.4조 원(93.0%)

2026년도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단위: 조 원, 개)

구분	내용	2026년 예산	비중	성과 지표수
전략목표 I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2.3	4.0%	5
전략목표 II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37.0	63.3%	6
전략목표 III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0.2	0.4%	1
전략목표 IV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1.3	2.3%	3
전략목표 V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16.6	28.4%	13
전략목표 VI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 등을 통해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1.0	1.7%	4

주 비중은 해당 관서의 2026년 총지출 성과관리 대상 규모 중 각 전략목표에 배정된 예산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2026년도 성과계획서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지표 성격



국토교통부

대표 성과지표

부처의 핵심업무와 관련된 재정사업의 최종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정한 성과지표

1 공공임대주택
임대율

정의

'23~'27년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계획('23.1)에 따라 실제 임대수요가 필요한 곳에 공급이 이루어졌는지 연도별 임대율을 산출하는 지표

선정 사유

해당 지표를 통해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주거복지 실현을 양적·질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주거복지 강화라는 프로그램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 추이

(단위: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	-	-	90.0	95.0	95.5	95.5
실적 ¹⁾	-	-	96.6	95.9	-	-

주 1 '23~'24년 실적치는 '26년 성과계획서에 기반하며, '25년 실적치는 부처에서 '27년 2월 말 집계 예정

2 비수도권 산업단지
공급실적

정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의 국가산단·일반산단·도청산단·농공단지 등에 대한 산업단지 공급 면적(누적)을 산출하는 지표

선정 사유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인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활력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이라는 프로그램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강소도시와 낙후지역의 차별화된 공간조성 및 지원'이라는 국정과제 목표 달성에 기여

지표 추이

(단위: km²)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	-	1,146	1,156	1,165	1,185	1,193
실적	-	1,150	1,171	1,177	1,193	-

3 제3자물류
활용률

정의

3자물류란 화주기업이 물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전문 물류기업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상품생산, 주문 처리, 재고관리 등 공급·생산 전반을 지원하는 동반자 개념으로 3자물류 활성화를 통해 물류산업 성장을 알 수 있는 지표

선정 사유

3자물류 활성화를 통해 국가 물류비를 절감하고, 전문 물류기업을 육성해 물류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3자물류 활용률은 전문 물류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등 국내 물류산업 성장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량지표로 판단

지표 추이

(단위: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	70.5	70.8	71.0	71.6	72.4	72.6
실적	70.7	70.8	71.4	72.2	73.3	-

국토교통부



4 통행시간 단축율 (신규 간선도로 설치구간)



정의 신규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의 개통 전·후 통행시간 차이를 백분율로 표시한 지표로, 도로망 확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선정 사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는 지역 간 이동을 책임지는 국가간선도로망의 중추로 지속적으로 건설, 시설개량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 안전이 바탕이 된 효율적인 도로환경 조성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국민 생활 편의 향상 등 경쟁력 있는 교통체계 구축

지표 추이

(단위: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	-	2	5	10	15	20
실적	-	2.1	5.9	10.7	-	-

5 열차 이용객 수 (고속·일반·광역)



정의 주요 철도 개통에 대한 국민들의 수혜효과를 정량적이며 상징적으로 확인 가능한 지표

선정 사유 전국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구축과 광역 철도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해 신속·편리하고 안전한 철도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국토교통부 핵심사업으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SOC 기반 구축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

지표 추이

(단위: 백만 명)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	106.0	1,153.4	1,197.4	1,428.8	1,607.9	1,662.0
실적	1,302.6	1,555.3	1,761.2	1,512.7	-	-

국토교통부

우수 프로그램

'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상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을 소개

*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 등 재정운용에 환류하기 위해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선정사유, 개선방향 및 환류계획을 분석하여 성과목표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자동차 및 교통정책



프로그램 목표

첨단 미래형 자동차 활성화, 교통안전 강화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준비

선정 사유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19년 3,349명에서 '24년 2,523명(잠정)으로 24.7% 감소(연평균 5.5%↓),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

주요 추진 전략

첨단 미래형 자동차 활성화 / 자동차안전도강화 / 교통사고예방 및 피해자보호 / 교통안전공단출연 / 교통계획 및 평가

프로그램 예산규모 ('26년 예산)	성과지표	'24년도 목표치	'24년도 실적치	달성률
2,489억 원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0.90명	0.83명	108.4%
	재활치료 만족도	84.0%	85.7%	102.0%
	자율주행차시험· 연구시설이용 지원률	80.0%	80.2%	100.3%

국토지리정보원 운영



프로그램 목표

신속하고 정확한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를 통해 국가공간 정보 이용편의 및 활용성 증대

선정 사유

매년 국토지리정보원 제공자료 이용회수가 증가하며, 항공사진·수치지형도·기준점 성과 등 공간정보 데이터 이용 실적도 온·오프라인 전반에서 증가

주요 추진 전략

국민 참여 및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공간정보 서비스 기반 확립 / 공간정보 관계기관의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공간정보 최신기술 및 인프라 도입

프로그램 예산규모 ('26년 예산)	성과지표	'24년도 목표치	'24년도 실적치	달성률
1,315억 원	국토지리정보원 자료 이용회수(매수)	14,323천 건	15,526천 건	108.4%

국토교통정보화



프로그램 목표

데이터 기반의 국토교통정보화 실현으로 국민편의 증진

선정 사유

'공공데이터 활용신청 제공건수' 증가 및 민간수요가 큰 국가중점데이터(자동차종합정보) 등 국토교통 분야 핵심 데이터 개방 및 활용도 증가

주요 추진 전략

공공-민간데이터 대통합 / 데이터 개방 확대 / 디지털플랫폼의 건전한 혁신·성장 촉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 / 데이터 기반 공공-민간서비스 활성화 기여

프로그램 예산규모 ('26년 예산)	성과지표	'24년도 목표치	'24년도 실적치	달성률
962억 원	공공데이터 활용신청 제공건수	29,423건	34,127건	116.0%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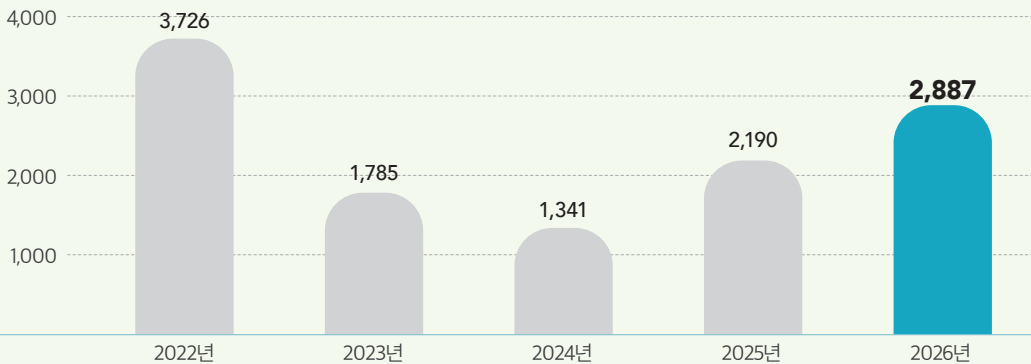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임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

비전: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일류의 명품도시, 세종시!

총지출 추이

(단위: 억 원)



주 2024년까지는 결산, 2025~2026년은 본예산 기준

총지출 2,887억 원 중 성과관리대상 2,718억 원(94.1%)

2026년도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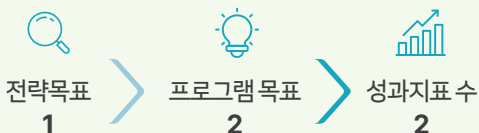
(단위: 억 원, 개)

구분	내용	2026년 예산	비중	성과 지표수
전략목표 I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계획대로 건설한다	2,718	100.0%	2

주 비중은 해당 관서의 2026년 총지출 성과관리 대상 규모 중 전략목표에 배정된 예산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2026년도 성과계획서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지표 성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표 성과지표

종합공정률



정의

행복도시 개발계획상 필지면적 전수조사를 통해 개발완료면적을 개발 계획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행복도시의 종합적인 개발현황을 드러내는 지표

선정 사유

26년('05~'30년)에 걸쳐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복합 사업인 도시건설의 전체 진척도를 파악하고 목표 수립·조정에 활용가능한 중요 지표

지표 추이

(단위: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	-	-	-	-	-	61.5
실적	-	-	59.7	60.3	60.9	-



주요국 월간 재정 통계

			총수입	총지출	수지
미국 12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3개월 차)	규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조 2,248억 달러 13.1%	1조 8,271억 달러 1.9%	6,023억 달러 적자 15.3%
독일 12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12개월 차)	규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4,279억 유로 2.9%	4,933억 유로 5.9%	654억 유로 적자 160.6%
일본 11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8개월 차)	규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54조 9,613억 엔 5.3%	73조 1,405억 엔 3.1%	18조 1,792억 엔 적자 41.4%
프랑스 12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12개월 차)	규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877억 유로 8.5%	5,102억 유로 0.2%	1,225억 유로 적자 20.4%
영국 12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9개월 차)	규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8,716억 파운드 7.5%	1조 121억 파운드 6.3%	1,405억 파운드 적자 0.1%

자료 미국)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onthly Treasury Statement : December 2025(1.31. 발표)

독일) Federal Ministry of Finance, Overview of federal budgetary and financial data up to and including December 2025(1.29. 발표)

일본) 재무성, 국고 세입세출 상황(12.19. 발표). 일반회계 기준이며 수지는 공식 발표치가 없어 세입-세출잔액으로 자체 계산한 수치임.

일본의 일반회계 수입은 공채(국채)연간 발행일정 및 이에 따른 수입변동으로 월별 변동이 큼.

프랑스) La situation du budget de l'etat au 30 decembre 2025(2.3. 발표)

영국)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Public sector finances, UK: December 2025(1.20. 발표)

대한민국 11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11개월 차)	규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581.2조 원 2.9%	624.4조 원 1.4%	43.3조 원 적자 1.6%
-------------------------	---------------------	---------------------	------------------	------------------	--------------------

자료 한국)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2.

해외재정동향 (2월)

주요국 이슈

01 미국

- 상원의회, 예산안 하원 승부 부분 섰다운 시작
- 트럼프 대통령,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부분 섰다운 신속 종료 촉구
- 세인트루이스 연준 발표, 미국 연방 재정 수지 동향 분석

02 독일

- 정부, 202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전망치 하향 조정
- 2026년 2월 소비자 신뢰지수 소폭 개선

03 영국

- 통계청, 물가상승률 발표, 5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
-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MPC), 기준금리 동결

04 프랑스

- 통계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발표
- 프랑스 의회 2026년 예산안 확정 및 재정적자 축소 목표 조정(4.7→5.0%)

05 일본

- 내각부, 경제·재정 자문회의를 통한 전망 논의
- 중앙은행, 경제활동 및 물가 전망 발표
- 집권당 압도적 총선 승리에 따른 일본 증시 최고치 경신

06 중국

- 2025년 GDP 5.0% 성장 목표 달성 및 4분기 성장률 4.5% 둔화
- 지방정부, 2026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 하향 조정

국제기구

01 OECD

- OECD 국가의 2025년 3분기 고용률 발표
- OECD 국가 2025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발표

02 IMF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

주요국 동향



1.31. | 상원의회, 예산안 하원 승부 부분 섀다운 시작¹⁾

- 1월 29일 상원 민주당 지도부, 토요일에 시작되는 정부기관 섀다운 방지를 위한 주요 예산안 패키지 심의에 합의 후 30일 1.2조 달러 규모의 초당적 예산안을 통과²⁾
 - 연방정부 대부분에 대한 예산을 9월까지 전액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1.2조 달러 규모의 예산이 71 대 29로 상원을 통과
 - 이번 합의는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전체 패키지에서 분리해 현재 수준으로 2주간 지원하는 것을 포함*
 - * 이민정책에 대한 새로운 제한 사항, 단속 등 조치를 논의할 시간 마련 목적
- 상원에서 예산안을 통과하였으나 자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3일 하원의 개회와 승인 시점까지 불가피한 예산 공백과 섀다운이 발생³⁾
 - 예산지원이 30일부터 일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부분 섀다운이 2월 3일 전까지 지속되며, 예산지원 중단 부처는 비필수 기능을 축소하여 운영 예정
 - * 영향부처(부분 섀다운): 국방부, 국토안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교통부, 주택도시개발부, 국무부, 재무부, 연방사업부, 연방조달청 등
 - * 영향이 없는 부처(기 예산 확보): 법무부, 상무부, 농무부, 내무부, 보훈부 등
- 대통령이 합의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만큼, 하원 의회 개회 초기 시점에 예산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유지

2.2. | 트럼프 대통령,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부분 섀다운 신속 종료 촉구⁴⁾

-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의원들에게 정책적 요구를 접고 30일 상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지지하여, 연방 정부의 부분 섀다운을 신속하게 종료할 것을 촉구
 - 부분적 섀다운이 30일 발효되고 하원의 예산안 통과를 기다리는 시점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예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원 의원들이 힘을 모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
 - * 1월 30일 상원 예산안 통과 후 2월 3일 하원 통과 시점 전까지 최소 사흘간의 불가피한 예산 공백과 부분 섀다운 발생
 - 일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경우 상원 민주당이 협상한 예산안에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
 - * 유권자들이 투표 전에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투표법 추가(VOTE ACT)를 요구
- 하원의장은 5개 세출법안과 국토안보부 2주 연장 등 전체 예산안 패키지를 3일까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조
 - 공화당은 하원에서 근소하게 과반을 차지하므로,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
 - 다만, 하원에서 법안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법안이 상원으로 다시 돌아가므로 섀다운이 더욱 장기화될 전망과 우려도 존재

2.5. | 세인트루이스 연준 은행, 미국 연방 재정 수지 동향 분석⁵⁾

- 세인트루이스 연준 은행은 재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년 12월까지 연방 예산을 분석하여 재정 동향을 제시
 - 지난 1년간 재정적자*는 12개월 누적액 기준 약 3,500억 달러 감소했으나, 경제 침체기를 제외한 시기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
 - *이자 비용을 제외한 수입과 지출 차이
 - 관세 추가 수입은 약 1,900억 달러로 나타나, 관세 발효 전 연간 관세 수입 약 8,000억 달러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이자 비용 제외 연방 지출은 12개월 누적 지출 기준 6.9조 달러로 정체 상태를 유지
- 2026년도 재정전망은 2025년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의 감세와 지출삭감 대법원 관세 합법성 판결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1.20. | 정부, 202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전망치 하향 조정⁶⁾

- 독일 정부는 국제 무역의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하여 2026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에서 1.0%로 하향 조정
 - 2025년 하반기 저조한 회복세가 2026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진단(연례 경제 보고서)
 - 전문가들은 독일 경제가 여전히 고물가, 높은 금리, 미국의 관세 위협을 비롯한 대외 무역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
 - 2027년 GDP 성장률은 기존 예상치인 1.4%에서 1.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하향 조정 전망은 세계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정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유럽연합(EU)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독일을 포함한 일부 EU 회원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
- 반면 경제학자들은 근로일 수 증가와 국방 및 인프라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가 향후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지적

1) <https://www.wsj.com/politics/policy/senate-set-to-vote-on-deal-ahead-of-partial-governments-shutdown-7bc3968b>
 2) <https://www.reuters.com/world/us/deal-reached-advancing-spending-bills-avert-us-government-agencies-shutdown-2026-01-29>
 3) <https://www.wsj.com/politics/policy/what-to-expect-in-a-partial-government-shutdown-d5f7a7b6>
 4) <https://www.wsj.com/politics/policy/trump-pushes-house-republicans-to-end-partial-shutdown-quickly-37961020>
 5) <https://www.stlouisfed.org/on-the-economy/2026/fed/look-recent-developments-federal-fiscal-balance>
 6) <https://reuters.com/world/europe/germany-cut-2026-gdp-growth-forecast-10-source-says-2026-01-20/>

1.28. | 2026년 2월 소비자 신뢰지수 소폭 개선⁷⁾

- 독일의 선행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2026년 GfK 소비자 신뢰지수가 -24.1을 기록
 - 독일 시장조사 전문 GfK와 뉘른베르크 시장판단 연구소(NIM)의 데이터에 따르면 소비자 신뢰지수가 1월 -26.9에서 2.8 포인트 개선되어, 시장 예상 수치인 -26.0을 1.9 포인트 상회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수입 기대가 상승하고 물가상승 우려도 후퇴한 것이 개선에 기여
- 세부 항목 가운데 가계 소득 전망이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어 소비자 신뢰지수 전체 상승에 기여
 - 향후 1년간 가계 재정 상황을 묻는 소득 기대 지수가 -6.9에서 +5.1로 급등
 - * 독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6년 초 13.90유로로 상승, 내년에는 14.60유로로 추가 인상 예정
 - 향후 1년간 경기 전망 지수는 1.2에서 6.6으로 상승*, 소비자 구매 의향 지수도 -7.5에서 -4.0으로 개선**
 - * 향후 독일 경제 전반의 흐름에 대한 응답자들의 긍정적 평가 의미
 - ** 고가의 내구재 구매 시기 적절성에 대한 긍정·부정 응답의 차이를 수치화, 물가상승 압력 완화에 대한 인식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
- 저축 의향 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2월은 17.9를 기록, 1월(18.7)에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월(8.2)에 대비 높은 수준
 - * 소비 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성향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시사



1.21. | 통계청, 물가상승률 발표, 5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⁸⁾

- 담배 가격과 항공료 상승으로 영국의 물가상승률이 지난 7월 하락세 이후 5개월만에 상승으로 전환
 - 2025년 12월까지 1년 동안 3.4%로 상승하며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소폭 상승보다 높은 수치 기록
 - 이번 물가상승은 영란은행의 연례 금리 결정 회의를 앞두고 발생하였으며, 상승률은 예상치인 3.3%를 상회
 - * 영란은행은 2025년 말 기준금리를 3.75%로 인하하였으며, 2월 5일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
- 일부 분석가들은 12월 데이터에 크리스마스 기간 항공료와 예산안에서 발표된 담배세 인상 등 일시적 요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 상승 추세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
 - 영국 통계청(ONS)은 크리스마스 및 새해 연휴 기간 항공료가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 2025년 11월 26일 예산안 발표에서는 제시된 관세 인상으로 인해 담배 가격이 상승함
 - * 인플레이션과 임금상승률이 여전히 높아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마이클 손더스 영란은행 금리 결정 위원)
- 영국 재무장관은 생활비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 야당은 정책 실패 지적
 -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철도 요금 동결, 처방전 비용 동결 등 예산안의 조치들을 언급하며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발언하였으며, 야당은 상승세의 원인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지적
 -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 가격의 4.5% 상승은 주로 빵, 곡물 및 채소 가격 상승에 기인

• 유럽 인접 국가들과 비교할 때 영국의 12월 물가상승률은 더 높은 편

- 독일의 물가상승률은 12월까지 2%를 기록하며 영국의 물가상승률을 상회, 프랑스 물가상승률은 0.7%를 기록
-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1월에 크게 하락하고, 봄에 영란은행의 2% 목표치가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

* 영국이 G7 국가 중 가장 큰 폭의 소비자물가지수 하락을 보일 것(도이치뱅크 수석 이코노미스트 산제이 라자)

2.5. |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MPC), 기준금리 동결⁹⁾

•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 이하 BoE) 통화정책위원회(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이하 MPC)는 2026년 2월 5일 기준금리를 3.75%로 동결하기로 결정

-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봄까지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향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

* 일부 위원은 0.25%p 인하를 주장하며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나, 투표 결과 5대4의 근소한 차이로 동결 결정

• 기준금리를 3.75%로 유지하는 데 투표한 위원들은 경기 부진과 고용 둔화, 인플레이션 압력을 이유로 신중한 금리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인한 위험이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추가적인 정책 완화의 여지가 있으나, 향후 회의에서 금리 인하 정당성을 검토할 것
클레어 롬바르델리 (통화정책 부총재)	임금 및 근원 인플레이션 강세와 달리 경기 활동 부진, 고용 둔화가 관측됨에 따라 빠른 금리 인하로 발생하는 비용 우려
휴 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지난 2년간 빠른 정책 제한 완화로 발생한 인플레이션 압력 경계, 장기 추세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 강조
메건 그린 (MPC 외부위원)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하는 정책 오류 비용이 크므로 추가 완화 고려에 앞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안정의 증거 확인 필요
캐서린 맨 (MPC 외부위원)	금리 인하 시 단기적인 물가상승 억제 효과 과대평가, 장기 금리 프리미엄 상승 위험 경고

• 기준금리를 3.5%로 인하하는 데 투표한 위원들은 가계 저축률 상승, 노동 시장 악화 등에서 비롯되는 하방 위험이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하며 중립 금리 3% 목표 주장

사라 브리든(부총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하방 위험에 대비해 조금 더 빠른 완화 정책 필요
데이브 램스덴 (부총재)	인플레이션 중앙 전망치가 하방 압력에 기울어져 있어 중기적으로 2% 목표를 지속 가능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보다 덜 제한적이어야 함
스와티 딩그라 (MPC 외부위원)	시장이 예상하는 기준금리 경로는 너무 긴축적이며, 노동 수요가 약한 상황에서의 정책적 실수는 하방 위험이 훨씬 더 커 보임
앨런 테일러 (MPC 외부위원)	6개월 후 상당한 금리 인하 여력이 발생하면서 금리가 목표치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중립 금리인 3%를 목표로 삼아야 할 것

7) <https://nim.org/en/consumer-climate/detail-consumer-climate/konsumklima-erholungstendenzen-auf-niedrigem-ni-veau>

8) <https://bbc.co.uk/news/articles/cnvg251g25yo>

9) <https://reuters.com/world/uk/bank-england-holds-rates-375-surprisingly-close-vote-2026-02-05/>



1.30. | 통계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발표¹⁰⁾

- 통계청(INSEE)은 2025년 4분기 경제성장률과 2025년도 연간 경제성장률 1차 추정치를 발표
- 프랑스의 2025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0.2%로 나타났으며, 2025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0.9% 성장
 - 3분기 경제성장률 0.5% 성장에 이어 4분기 성장세는 0.2%로 다소 둔화
 - 연간 경제성장률은 2024년 1.1%, 2023년 1.6% 대비 낮아졌으나 기대 수준에 대체로 부합
- INSEE와 프랑스 정부는 2026년 초 국내 경기 및 대내·외적인 재정 불확실성에 주목하여 향후 경제 정책을 조정할 예정
 - 전월 대비 가계 재화 소비지출은 11월 0.3% 감소에 이어 12월 0.6% 감소
 - *제조품 소비의 급격한 하락이 원인

2.2. | 프랑스 의회 2026년 예산안 확정 및 재정적자 축소 목표 조정(4.7→5.0%)¹¹⁾

- 프랑스 의회는 2026년도 국가 예산안을 최종 승인했으며, 수개월 지속된 재정 교착 상태를 해소
 - 수개월간의 초당적 협상 실패 후, 르코르니 총리는 의회 표결을 우회하는 헌법 조항을 발동, 사회당에 타협안 제공 등을 통해 불신임 투표를 극복
 - 2026년 예산안은 프랑스 헌법재판소 심사 및 승인을 받은 직후 발효될 예정
- 정부의 2026년도 재정적자 축소 목표는 당초 GDP 대비 4.7% 수준이었으나, 정당들의 정책적 요구 수용 후 재정적자를 GDP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
 - 2025년 추정치 5.4%에서 감소한 5.0%로 목표, 당초 목표치였던 4.7%에서는 후퇴
- 재정적자 축소는 세금 인상, 지출 절감을 통해 재정 목표치 달성 예정
 - 주요 세입 조차: 매출 10억 유로 이상 기업에 대한 추가세, 부유세, 고소득 임시세 연장 등
 - 주요 지출 절감: 당초 목표인 170억 유로 대비 대폭 삭감한 90억 유로로 축소(내무부, 법무부, 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에 적용)
 - *국방 예산은 다년도 군비증강 계획의 일환으로 65억 유로 추가 증액

10) https://www.lemonde.fr/economie/article/2026/01/30/la-croissance-francaise-en-hausse-de-0-2-au-quatrieme-trimestre-2025-et-de-0-9-sur-l-ensemble-de-l-annee_6664707_3234.html

11) <https://www.reuters.com/business/what-is-frances-2026-budget-2026-02-02/>



1.22. | 내각부, 경제·재정 자문회의를 통한 전망 논의¹²⁾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026년 첫 경제·재정 자문회의 주재를 주재하여 내각부가 제시한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
- 주요 성과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경제·재정 관리를 통해 28년 만에 재정 흑자 달성을 제시
 - 2025년 추경 이후 국채 발행 규모를 전년보다 축소, 2026년 예산에서 신규 국채 발행액을 30조 엔 이하로 유지(2년 연속 축소)
 -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경제 및 재정 관리 수행을 통해 28년 만에 재정 흑자를 달성
 - * 2026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최소 수준으로 균형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후 일정한 흑자 유지를 예상
 -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지방정부 부채비율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을 전망
- 경제 성장 및 재정 상황에서 위험 요인으로 높은 부채비율과 금리 상승기 위험 등을 제시
 -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금리상승기 이자지급 부담 증가 가능성 존재
- 정책 방향은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경제·재정 통합 개혁을 추진하고 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시장신뢰 확보를 위해 기존 회계연도별 재정 흑자 목표달성 점검방식을 다년간 흑자 균형을 점검하는 정책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

1.23. | 중앙은행, 경제활동 및 물가 전망 발표¹³⁾

- 일본 중앙은행(BOJ)은 세계 경제가 성장세로 복귀하고 정부의 경제 대책과 완화적인 금융 환경 등의 요인으로 일본 경제는 앞으로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약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2% 미만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변동성이 큰 물가지수를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 경기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근원물가상승률은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물가안정 목표치인 2%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함

12) Prime Minister's Office of Japan, "Meeting of the Council on Economic and Fiscal Policy". <https://japan.kantei.go.jp/104/actions/202601/22keizai.html>

13) 「経済・物価情勢の展望(2026年 1月)」, <https://www.boj.or.jp/en/mopo/outlook/gor2601b.pdf>

• 일본 경제 활동과 물가 전망에 대한 위험 요인

- 경제 상황은 각 관할구역의 무역과 기타 정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 해외 경제 활동과 물가 개선, 기업 임금과 물가 책정, 금융 및 외환 시장 발전 등의 주의가 필요

• 중앙은행은 2%를 목표로 하는 정책금리로 통화정책을 운용

- 경제활동과 물가 개선에 맞춰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통화 완화 수준을 조정할 것임
- 통화정책위원들의 실질 GDP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은 다음과 같음(실제 수치와 전망 수치)

* 실질 GDP: 2022년 1.4%, 2023년 -0.0%, 2024년 0.5%, 2025년 0.9%, 2026년 1.0%, 2027년 0.8%

* 소비자물가상승률(신선식품 제외): 2022년 3.0%, 2023년 2.8%, 2024년 2.7%, 2025년 2.7%, 2026년 1.9%, 2027년 2.0%

2.9. | 집권당 압도적 총선 승리에 따른 일본 증시 최고치 경신¹⁴⁾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일본 증시가 최고치를 경신

- 9일 기준 닛케이 225 평균 주가 4.4% 급등, 토픽스 지수 약 2.3% 상승

* 토픽스 지수: 도쿄 증권거래처 1부 상장 전체 종목의 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지수

• 다카이치 트레이드와 일본 총리의 재정의 지속가능성 강조, 재무장관의 엔화 동향에 대한 경고 및 개입 가능성에 대한 발언 이후 일본 채권, 엔화는 하락이 제한되며 상대적으로 안정세

- 엔화는 달러 대비 0.2% 상승한 156.85를 기록,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545%로 마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27%(4.0bp 상승)

* 다카이치 트레이드: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위해 부채를 늘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일본 주식을 매수하고 채권, 엔화 등을 매도하려는 움직임

• 경제전문가들은 일본 집권당 총선 압승 결과, 다카이치 내각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압박 감소로 일본 증시와 재정정책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다양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

- 일본 은행이 4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6월 회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한 단기 채권 수익률, 익일물 인버스 스왑 등이 총선 전보다 조정

* 익일물: 금융기관 간 초단기 자금 거래에서 거래 다음날(익일)에 자금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적용되는 금리

-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투자계획 추진 가능성 등이 증가



14) hankyung.com/article/202602094865i

15) <https://www.cnbc.com/2026/01/19/china-q4-gdp-grwoth-2025-target-retail-sales-industiral-output-investment-income-employment.html>

16) <https://ft.com/content/7ccb65e3-b003-4ac6-8bce-a5037c2c7d71> (Financial Times, Chinese economy)



1.19. | 2025년 GDP 5.0% 성장 목표 달성 및 4분기 성장률 4.5% 둔화¹⁵⁾

- 국가통계국(NBS)은 중국의 연간 GDP가 전년대비 5.0% 증가해 정부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발표
 - 2025년 연간 GDP는 140조 1,87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0% 증가
 - 2025년 4분기 GDP 성장률은 38조 7,911억 위안 규모로 4.5% 수준에 그쳐 3분기 4.8% 대비 둔화*
 - * 2022년 이후 최저 수준
 - 분기별 추이는 1분기 5.4%, 2분기 5.2%, 3분기 4.8%, 4분기 4.5%로 지속적인 약화가 식별
- 중국 정부의 수출 중심 성장구조와 부동산 침체와 소비·투자 약세 등에 따른 내수 부진 속 불균형 성장으로 인해 디플레이션 압력 가중
 - 12월 소비 판매는 +0.9%, 고정자산 투자는 연간 +3.2% 수준(유지), 생산자 물가(PPI)의 경우 -1.9%로 디플레이션 압력 가중
 - 고용시장의 경우, 도시 실업률이 5.1%로 안정적 수준이나, 청년실업률이 15% 지속적인 문제로 정착
- 중국 정부의 고품질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하지만, 민간 투자 및 경기 회복 지연으로 재정, 통화 부양 의존도 상승이 우려

1.29. | 지방정부, 2026년도 경제 성장을 목표치 하향 조정¹⁶⁾

- 중국 31개 성(省)급 지방정부 중, 성장 목표를 발표한 29개 지역 중 19개 지역이 2025년에 비해 경제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함
 - 이는 중국 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 목표를 4.5~5.0%로 설정한 여파에 따른 결과이며, 부동산 시장위기, 무역 갈등 및 산업 과잉 등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되며 성장을 약화로 연결
 -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는 성장 목표를 5.0%로 유지, 광둥성 등 3개 성은 4.5~5.0% 사이에서 목표치를 조정, 나머지 4개 성은 4.5%까지 목표치를 하향 조정
- 지방정부 성장을 목표치 조정은 재정지출과 국영은행 대출 확대 등 중국 재정정책에 광범위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 시진핑 주석, 예산 규모 대비 저성과 프로젝트, 과도 지출에 따른 경제적 성과 왜곡을 경계하고 느리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 촉진을 강조
 - 중국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수출이 단기적으로 감소하더라도 경기 부양 정책에 적극 개입하여, 5.0%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맥쿼리)
- 지방 정부별 목표치의 전반적 감소는 중국 정부가 국가 목표치와 동일한 조치를 각 지방정부에도 취할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로 해석



1.25. | OECD 국가 2025년 3분기 고용률 발표

- OECD 국가의 고용률은 2025년 3분기에도 사상 최고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 OECD 전체 고용률은 2025년 3분기 기준 70.3%로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의 역대 최고치 기록
 - OECD 국가 중 16개국에서 고용률 유지, 12개국에서 하락, 9개국에서 상승
 - * 한국의 2025년 3분기 15~64세 고용률은 69.9%로 전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
- OECD 국가의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높은 수준을 지속하며 고용 안정성을 뒷받침
 - OECD 기준 15~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74.1%로 사상 최고 수준 유지
 - OECD 국가 중 약 3분의 2 이상이 해당 수준을 상회
 - * 한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1.9%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지속
- 2025년 11월 OECD 국가의 실업률은 5.0%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 유럽연합 실업률은 6.0%, 유로 지역은 6.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점진적 안정세 유지
 - * 한국의 실업률은 2.6~2.7% 수준으로 OECD 평균을 크게 하회

2.9. | OECD 국가 2025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발표

- 2025년 12월 OECD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 OECD 국가의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측정한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은 2025년 12월 기준 3.7%로 전월(3.8%) 대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OECD 38개국 중 13개국에서 물가상승률 하락, 9개국에서 상승, 16개국에서 대체로 안정적 수준
 - *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3% 내외 수준으로 OECD 평균(3.7%) 대비 낮은 수준
 - 식료품 물가와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에너지 물가는 하락
- G7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반적으로 인정적인 흐름을 보임
 - G7 국가의 물가상승률은 2025년 12월 기준 2.4%로 전월(2.5%) 대비 소폭 하락
 - 일본은 연료 보조금 도입과 기저효과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전월 대비 0.8%p 하락
 - 독일의 물가상승률은 0.5%p 하락한 반면, 캐나다는 2024년 말 일시적 세금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로 물가 상승



1.19.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¹⁷⁾

• 글로벌 경제는 다양한 요인 속에서도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

-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6년 3.3%, 2027년 3.2%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지난 2025년 10월 세계 경제 전망(WEO)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2026년 경제성장률은 소폭 상향(0.2%p) 조정되었고 2027년 경제성장률은 변동 없음

- 기술 투자 증가, 재정·통화정책 운용, 민간 부문 적응력이 무역 정책 변화 역풍을 최소화하였으며, 전 세계 물가상승률은 2026년 3.8%, 2027년 3.4%로 점진적 하락 예상

* 북미·아시아의 AI 투자와 완화적 금융 환경이 경제성장을 견인

• AI 과열된 기대, 무역 긴장,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세계 경제 전망은 여전히 하방 압력 위험 존재

- AI 생산성 과도한 기대 시, 투자가 급감하고 금융시장 충격 가능성이 존재

-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경제활동에 더 큰 부담 초래

- 지정학적 갈등 확대 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위험에 따른 세계 경제 혼란 가중 우려

- 국가부채 증가, 재정적자 심화는 장기금리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금융 여건에 악영향을 초래

• 재정 완충 및 수요 충격 대응, 통화정책 조정, 협력 등을 통한 경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 긴급한 지출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완충 장치를 확충 노력 필요하며, 중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요 충격에 대한 대응책 수립

* 각국은 재정수입 확대, 지출 합리화, 민간 투자 유치 등 지출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며 경기 변동 시(경기 침체기 포함)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지원하는 대응책 마련

- 물가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조정하고 독립성을 유지

*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며 명확하고 일관된 소통은 예측 불가능한 환경을 헤쳐나가는 데 매우 중요

- 무역 정책에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다자 협력을 강화*하며, 노동 시장, 교육, 규제 체계 등의 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잠재적 생산량, 일자리 창출 촉진**

* 실질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일관된 무역 정책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준수

** 더 나아가 기술 발전을 활용하는 디지털 전환·인공지능 도입·재생에너지 투자가 생산성 향상을 가속화하고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대에 핵심 요소임

| 주요 국가별 세계 경제 전망 |

(단위: %)

구분	2026년 1월 전망		2025년 10월 전망 차이	
	2026년	2027년	2026년	2027년
세계 경제(World Output)	3.3	3.2	0.2	0.0
선진국	1.8	1.7	0.2	0.0
신흥개도국	4.2	4.1	0.2	-0.1
세계 소비자물가(Consumer Prices)	3.8	3.4	0.1	0.0
선진국	2.2	2.1	0.0	0.0
신흥개도국	4.8	4.3	0.1	0.1

17) IMF, "World Economic Outlook".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weo/2026/january/english/text.pdf>

02

2026 February

| 재정 |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출범 (기획예산처, 1.28)

- 외부 공모, 시민사회, 관계부처 추천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 150명으로 구성된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출범
- 재정사업 성과평가단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새롭게 도입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
- 재정사업 성과평가단은 4개월간 15개 분야의 약 2,700개 정부사업을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결과는 5월 말 부처 통보 후 2027년 예산안에 반영
- 국민에게는 하반기 중 열린재정을 통해 결과를 공개
- 이번 성과평가단은 전체 위원 중 약 10%를 시민사회 인사 및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구성하여 시민참여를 제고하였으며, 전 과정에서 부처 담당자, 평가단, 전문기관이 긴밀하게 소통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계획
- 재정사업 성과평가단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재정운용 효율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



2025년 총세입·총지출 마감 (재정경제부, 2.10)

-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
- 세입·세출 마감 결과 총세입 597.9조 원, 총세출 591.0조 원, 결산잉여금(차액) 6.9조 원, 이월액 3.7조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2조 원으로 확정

- 2025회계연도는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손 결손에서 벗어나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 규모를 초과, 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을 적극 집행한 결과 세출예산 집행률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이번 마감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계 기준으로 총지출 기준 주요 내용은 결산보고서 작성 이후 공개 예정

| 경제 |



2026년 1월 및 소비자물가동향 (국가데이터처, 2.3)

-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대비 2.0% 각각 상승
- 전월대비 공업제품은 하락하였으나, 서비스, 농축수산물, 전기·가스·수도가 상승하여 전체 0.4% 상승
- 전년 동월대비 서비스, 공업제품, 농축수산물 및 전기·가스·수도가 모두 상승하여 전체 2.0%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전년 동월대비 2.2% 각각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4% 상승, 전년 동월대비 0.2% 하락



2026년 1월 고용동향 (국가데이터처·재정경제부, 2.11)

- 2026년 1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1.0%, 15~64세 고용률은 69.2%로 나타났으며,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0.8만 명 증가하여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고용 증가세는 그간의 증가세에 따른 기저효과, 일시적 요인(날씨·명절) 중첩으로 조정,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수출실적, 기업심리 회복세와 SOC 투자 확대 등 영향으로 감소폭 축소
- 정부는 경기회복 모멘텀 확산이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과 고용 선순환 강화, 청년·지역 등 고용 취약부문 보안을 위한 노력을 확대할 계획

1월

| 재정 |

- 2027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예산처)

| 경제 |

- 2026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 한국은행 2025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국제 |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국제통화기금(IMF)
- 수정경제전망(World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2월

| 재정 |

- 2025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 2025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예산처)

| 국제 |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3월

| 재정 |

-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예산처→각 중앙관서)

| 경제 |

- 한국은행 2025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4월

| 재정 |

- 2025년 결산 감사 의뢰 (기획예산처→감사원)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 국제 |

- 국제통화기금(IMF)
- 세계경제전망 (WorldEconomic Outlook) 발표
-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5월

| 재정 |

-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 2027년 예산요구서 제출(각 중앙관서→기획예산처)
- 2025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 2025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2025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경제 |

- 국가데이터처 2026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 국제 |

-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6월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6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 국제 |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7월

| 경제 |

- 202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한국은행 2026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6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

| 국제 |

- 국제통화기금(IMF)
- 수정경제전망(World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8월

| 재정 |

- 2027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 경제 |

- 국가데이터처 2026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

9월

| 재정 |

- 2027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0월

| 재정 |

- 한국은행 2026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국제 |

- 국제통화기금(IMF)
- 세계경제전망 발표
-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11월

| 경제 |

- 국가데이터처 2026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국제 |

- OECD 경제전망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2월

| 재정 |

- 2027년 예산 확정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주요 쟁점과 동향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이후 성과목표관리·재정사업자율평가·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등 다층적 제도를 구축해 왔으나, 성과정보의 실질적 활용과 예산 의사결정 연계라는 본래의 목적은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네덜란드 등 선진국 사례는 포괄적 성과지표 설정보다 선별적·전략적 접근이 효과적이며, 중기 예산 시계 확보·다년도 예산제도·정부 내 재정 역량 내재화 등 보완적 개혁이 병행될 때 비로소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는 모습을 보여준다. 2026년 성과평가체계 전면 개편이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근본적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노옥 (핵코스콤 상임감사, 한국감사학회 부회장)

1. 논의의 배경

정부 지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정부 지출을 성과정보(performance information)와 연계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1960년대 미국의 프로그램 예산제도로부터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강화됐다. 1990년대에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가 성과 지향적 예산제도 개혁의 두 번째 흐름을 만들어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중반의 성과주의 예산제도¹ 도입이 있었다. 이 두 번째 흐름은 「신공공 경영(New Public Management)」 이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는 신흥부국과 저소득 국가들에도 광범위하게 확산하였다.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국가인 미국,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는 기존 접근법의 대

폭적 변화가 일어났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용을 통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도전적 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통해 투명성 제고, 자원배분의 합리성 확보, 재정관리 전반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는 유지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일방적인 기대의 비현실성을 깨닫고 보다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는 동향이 관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도 그동안 지속적인 개선과 더불어 두 번의 대폭적인 변화²가 있었으며, 현 정부에서도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통해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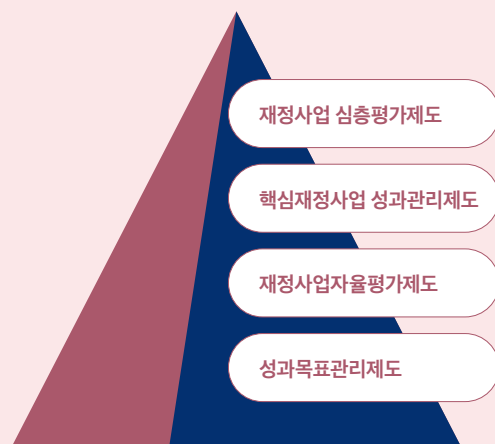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발전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고,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쟁점과 글로벌 동향을 연계시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변화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는 크게 네 가지 층위의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성과목표 관리제도-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이다. 이 외에도 보조금사업평가, 일자리 사업평가,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 등과 같은 주요 정책 영역이나 비목 중심의 사업평가제도가 존재한다. 본 고에서는 포괄적인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1>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의 주요 요소



1.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Performance) 예산의 연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도 운영의 경험 누적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간접적 연계로 제도의 초점이 옮겨 가면서, 명칭이 Performance-based Budgeting, Performance-informed Budgeting 등으로 진화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성과주의 예산주의 대신, 재정 성과관리제도로 지칭하기 시작하였다.
2. 2018년의 재정사업자율평가의 부처 자율화 및 핵심재정사업성과관리 도입과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는 2021년 신설된 제4장의2(성과관리)의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로 대폭 확대 및 체계화되었다.

가. 성과목표관리제도

‘성과목표관리제도’는 프로그램 예산구조의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등에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하여, 연간 성과계획서와 연간 성과보고서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과거에는 단위사업 중심으로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설정되었으나, 현재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설정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예산편성의 초점인 세부사업 관련 정보도 포함할 예정이다.

1999년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활용방안 마련 미비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지는 못했다. 2003년에는 신정부의 포괄적인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재정 성과목표관리제도라는 명칭으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였다.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에 담긴 성과지표와 목표치 중심의 성과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자원배

분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개별 단위사업의 성과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2005년에 도입되었다.

단위사업 중심의 성과목표관리제도는 2022년부터 프로그램 중심의 성과목표관리제도로 전환되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담고,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분석 내용을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에 담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수준의 성과계획 수립과 정책 분석의 역량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프로그램 성과계획서의 내용의 충실화와 환류 방안 마련이 숙제로 남아있다. 프로그램 성과지표와 목표치만을 포함함으로써, 성과관리와 평가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된 문제점은, 2026년부터 세부사업 성과정보를



포함하기로 함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프로그램 예산구조의 '단위사업' 관련 정보가 사라짐으로 인해, '단위사업'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의문이 있다. 프로그램 예산구조는 통상적으로 프로그램(program)-하위프로그램(sub-program)-활동(activity)의 세 개 층위로 구성된다. 프로그램과 하위 프로그램 중심으로 성과정보가 생산되고, '하위 프로그램' 또는 '활동'은 사업부처의 자율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는 표준적 관행에서 벗어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미국 연방정부의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PART)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하였으며, 사업의 계획-집행-성과-환류 단계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검표를 기반으로, 개별 사업의 등급을 결정하여 환류하였다. '미흡' 이하 등급의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 이상의 예산삭감을 권고함으로써, 성과정보가 예산편성에 활용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제도 도입 후 10여 년이 지남에 따라 단위사업의 성과지표가 안정화되고, 부처의 자체평가 역량도 강화되었다는 판단하에, 2016년부터는 평가 대상 사업 전체 예산 금액의 1%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개선 또는 지출 구조조정안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운용 방식을 변화시켰다. 2018년부터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방식도 부처의 자체평가로 전환하고, 기획재정부의 확인·점검과정은 최소화했다. 올해부터는 부처의 자체평가는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축소하고, 외부 평가단을 활용한 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를 '정상추진/사업개선/감액/폐지·통합'의 형태로 도출할 예정이다. 외부 평가 결과

를 환류 방식의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평가의 목적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이다. 정부 내부 역량의 제한으로 인해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면, 환류를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일 수 있다. 다만, 외부 전문가는 분석 관점의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환류 방식은 정부의 내부 과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바람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주요 쟁점을 논하는 절에서 정부의 역량과 관련하여 좀 더 상세히 설명하겠다.

다.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와 심층평가

2018년에 이루어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확인·점검의 최소화과 동시에 '핵심사업평가'를 도입하였다. 80개 사업(2018년 기준)을 선별해서 사업 집행 과정부터 기획재정부·부처 협업 기반의 성과관리를 시도하였다. 예산 당국과 사업부처의 전통적인 긴장 관계에서 진일보하여, 서로 협업하여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통로를 새롭게 수립하고자 하였다. 다만, 적시성 있는 문제해결형 성과관리가 작동하기 위한 기초 작업 미흡과 관계자들의 역량의 한계로 인해, 의도한 성과를 창출하지는 못했다. 의도했던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 당국과 사업부처 내의 내재화된 역량의 활용이 필요했지만, 통상적인 평가와 유사하게 외부 평가단에 의존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러한 교훈에 근거하여, 2023년에는 '핵심사업평가'를 폐지하고,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새로운 제도라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기획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평가' 대신 '성과관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특정 정부의 임기 동안에 중요한(다부처) 사업을 선별하여, 사업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애

요인을 해소해 나가면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아쉽게도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도 여전히 외부 평가단에 의존하여, 일반적인 평가제도와 유사하게 운용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 요소인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전통적인 사업 평가(evaluation)의 접근법을 채택하여, 다부처 사업이나 재정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사업 개선과 지출효율화 방안을 도출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통상적인 재정사업 성과관리와는 구분되는 사업평가 제도이므로, 본 고에서는 더 이상 기술하지 않는다. 서구에서는 성과관리와 성과평가는 명확히 구분되는 영역으로서, 해당 전문가 집단도 다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두 영역에 대한 이해가 혼재된 경향이 있다. 이상적으로는 두 가지 접근법이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으며, 특히 사업평가 정보가 성과정보와 예산편성의 연계를 강화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주요 쟁점과 동향

재정 성과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과거의 접근법과 최근의 동향을 비교해 보자. 특히 실효성 있는 재정 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네덜란드의 동향을, 쟁점마다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 성과관리제도가 포괄하는 범위는 무엇인가? 과거의 접근법은, 포괄적인 프로그램 예산구조를 개발하고 이에 대응하는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더욱 유연하고 선별적인 접근법이 관찰되고 있다. 중요한 서비스 전달 영역과 전략적 정책 우선순위를 대상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접근법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2000년대 초기에 도입한 재정 성과관리제도는 정책과 예산의 연계를 위해 프로그램 예산구조의 도입과 더불어 체계적으로 모든 프로그램과 하위 프로그램에 대해 ‘정책 목표·활동 내용·소요 비용’에 관한 정보를 담고,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는 접근법을 취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행정부담이 과도하고, 실제 생산된 데이터의 활용도도 제한적이라는 점이 발견되었다.

2013년부터는 성과 정보의 활용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고,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장점은 유지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정책 목표 중에서 재정사업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영역은 성과지표를 설정하되 목표치를 별도로 설정하지는 않도록 했다. 재정사업의 영향이 분명한 경우에만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예·결산서에 담기는 투입정보를 강화하고,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사업평가 내용을 적극 포함하여, 효과성 및 효율성에 관한 판단을 돕도록 했다. 성과정보의 활용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은 사전적 성과계획 수립의 강화, 사업평가 정책의 전략성 강화, 그리고 지출검토(Spending Review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도입만으로 기대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과거에는, 예산 과정을 중심으로 성과 기반의 경영체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의도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최근에는 다른 영역의 개혁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재정 성과관리제도가 작동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중기적인 시계(time horizon)의 확보, 성과 창출을 위한 관련자들의 경영³ 재량권과 역량 확보, 보완적인 제도의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중기적인 시계 확보를 위한 예산제도 개혁으로서, 다년도 예산제도 운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다년도 예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성과정보의 생산과 활용을 단년도 예산제도 내에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도전적인 일이다.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과 사업 담당자의 적정 재량권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공무원이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재량권과 중기적 시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재정 성과관리제도가 작동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와 같이 1~2년 단위의 순환보직 중심의 인사 운용에서는, 예·결산서의 성과정보가 공무원 개인의 유인과 결합하여 의미가 작동하기 어렵다. 네덜란드 정부 내에는, 비공식적으로 3·5·7 규칙이 있다, 한가지 업무를 시작하면 3년은 계속해야 하고, 5년이면 다른 업무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7년이면 무조건 옮긴다는 암묵적 인사 운용의 규칙이다.

셋째, 재정 성과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역량이 정부 내에 있는가? 재정 성과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부담 소화와 데이터 생산과 분석 역량 확보는 어려운 과제이다. 특히 재정기능이 중앙 정부의 예산 당국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부처의 재정기능이 취약할 경우, 역량 결핍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성과정보가 제대로 생산되고 분석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재정기능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네덜란드의 경우, 재정기능이 범정부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 내의 재정 담당 공무원들은 입직 과정

에서 2년간의 ‘재정 인턴십(financial internship)’ 과정을 통해 1년간 재무부, 6개월간 사업부처 재정기획실, 6개월간 정책평가기관에서 근무하고, 동시에 ‘재정 및 경제 국가 아카데미(The National Academy and Economics)’에서 훈련받는다. 이러한 입직 과정과 주기적인 부처와 재무부 간의 인사이동을 통해 재정기능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특정 부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범정부적인 관점에서 재정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과관리와 평가를 위한 역량은 대부분 외부 전문가에게 의존하고 있다. 거의 모든 성과관리나 평가제도는 외부 평가단을 통해 작동한다. 데이터나 정책 분석을 외부 전문가에 의존할 수 있지만 실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도출을 위한 제도의 기획, 데이터 생산 및 관리, 기초적인 분석, 정책 대안 도출 등은 정부 내의 기능으로 내재화될 필요가 있다.

4. 맺는말

정부는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수립을 계기로 ‘20여 년 만에 성과평가체계 전면 개편’이라는 보도자료(2026년 1월 27일)를 내고, 성과관리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의 제도 운용의 경험에서 도출되는 교훈에 근거한 근본적 개혁 방안까지는 이르고 있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도되는 단기 개혁으로는 의미가 있다. 이번 개혁을 시작으로, 예산 과정의 합리화와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의 발전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3. 우리나라에서는 management라는 용어를 관리라는 용어로 많이 표현하지만, 관리의 현상 유지의 소극적 의미가 강하고, management는 능동적이고 창의성 발휘가 강조되는 개념이다.

2026년 국내외 경제전망과 돈의 대이동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지형이 펼쳐진다. 세계 주요국들은 유동성 공급 경쟁에 나섰고,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돈의 가치를 낮추는 전략을 구사한다. 저성장 속 자산 급등, 이 낯선 풍경에서 돈이 흐르는 방향을 포착하는 것이 2026년의 과제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2026년 세계 경제전망

2026년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과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IMF는 각각 3.3%, 3.3%로, OECD는 각각 3.2%, 2.9%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이 성장 둔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도 뚜렷한 회복세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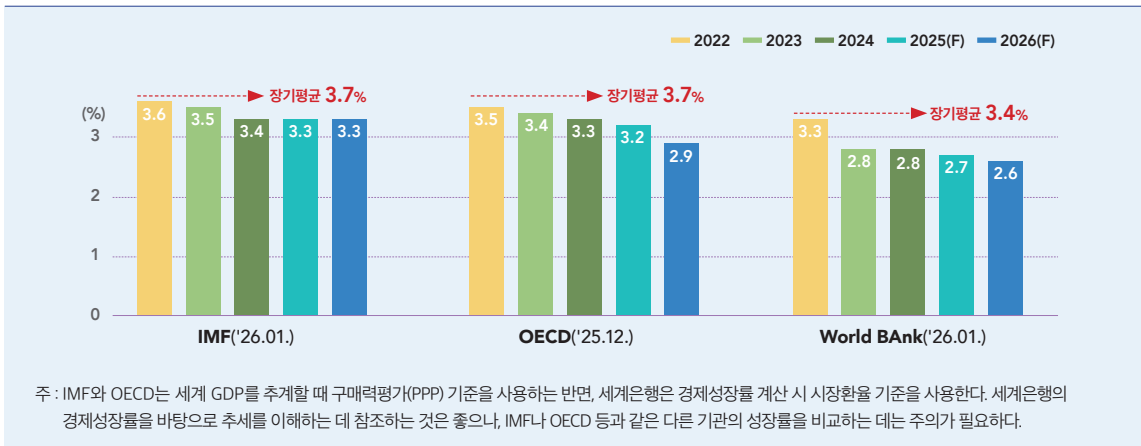
2026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하는데, 여전히 잠재성장률 2%를 밑도는 수준이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유동성 파티가 시작된다. 금값과 은값은 역사상 최고점을 갱신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의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고, 한국 코스피도 역사상 최고점을 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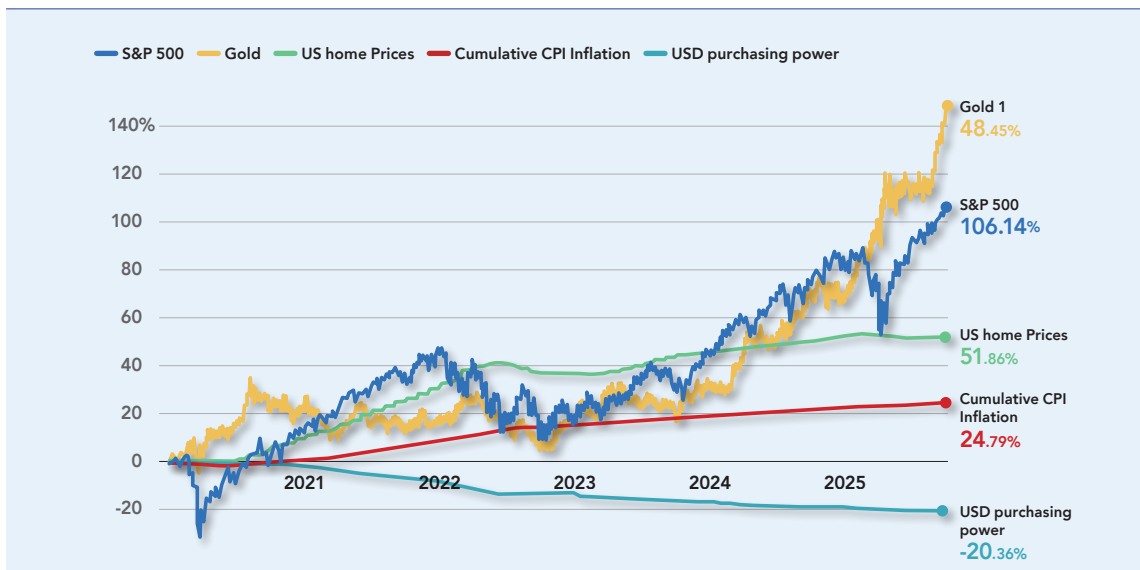
<그림 1> 주요 국제기구의 2026년 세계 경제전망 비교

자료 : IMF, OECD, WORLD BANK.



<그림 2>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자료 : OPENING BELL DAILY



신하고 있다.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모든 자본과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모든 것이 오른다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오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니 더 많은 현금을 주고 현물과 바꾸는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게 낫겠다. 대부분의 주요국이 그렇지만, 미국을 조망해 보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2026년 11월 3일)를 겨냥한 대규모 정치 활동에 나선다.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트럼프의 레임덕이 일찍 찾아오고 공화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기반을 놓치기 쉽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가용한 유동성 공급 수단을 총동원해 증시를 부양하고, 경제주체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지율 제고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선거를 겨냥한 유동성 파티를 구상해 왔다. 첫째, 통화정책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파월 연준의장에게 지속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해왔다. 둘째, 부채한도 증액을 의회에 통과시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준비했다. 셋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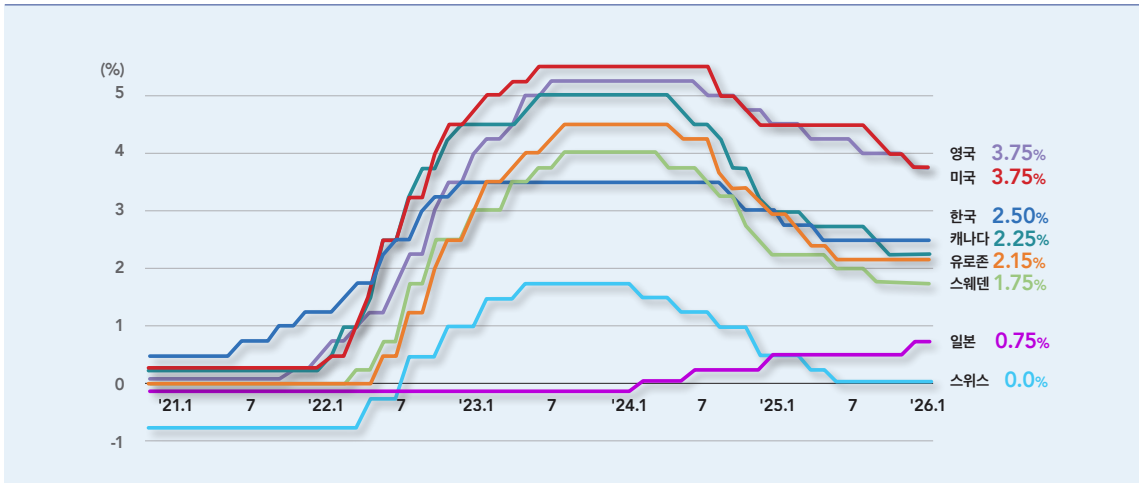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 방안을 마련했다. 넷째,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면서 유동성 공급과 미국 국채 매입처 확보를 준비했다.

완화적 통화정책 : 기준금리 인하를 향한 여정

2025~2026년은 피벗의 시대다. 세계 주요국들이 각자 판단하는 중립금리를 향해 기준금리를 인하 또는 인상하는 시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2026년 2월 기준으로 영국은 5.25%→3.75%, 캐나다는 5.00%→2.25%, 유로존은 4.50%→2.15%, 스웨덴은 4.00%→1.75%, 스위스는 1.75%→0.00%로 인하해 왔다. 한국도 3.50%→2.50%로 인하 기초를 이어왔다. 세계 주요국들의 물가가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중립금리를 찾아 인하가 이루어져 왔으며, 내수경기 침체가 극심한 유럽 국가들은 유독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를 단행해 왔다. 한편 일본은 자국이 설정한 중립금리 수준(1.00~1.50%)을 향해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여정 중으로, -0.10%에서 0.75%까지 올라왔다.

<그림 3>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자료 : 각국 중앙은행



미국도 피벗의 시대에 있는 것은 매한가지이지만, 큰 장애물 앞에 망설이는 모습이다. 마치, 빠르게 달리던 자동차가 안개가 자욱한 길을 만나자, 속도를 줄이고 조심스레 길을 찾는 모습에 비유된다. 2024년 5.50%→4.50%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2025년 들어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단행되면서 통화정책을 멈춰 세워 추가금리 인하 여부를 망설이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1)무역정책의 불확실성과 (2)무역정책이 미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 중단을 지속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 온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까지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을 곧 지명할 것이다. 차기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줄 인물이 될 것이다. 3.75%의 기준금리를 운용하고 있는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1% 수준에 가깝게 대폭 인하하기 위해서 중립금리에 대한 재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3% 수준의 중립금리가 아니라, 그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추가 금리 인하 폭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양적완화라는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재무부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때, 연준이 장기 국채를 적극 매입하는 방식으로 완화된 통화정책을 도입할 것이다.

확장적 재정정책: 감세법인(OBBBA) 통과와 부채한도 상향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 관점에서도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2025년 7월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가 통과되고, 부채한도(debt ceiling)가 상향되었다.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국채 발행 확대에 의존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한도를 약 5조 달러 상향한 만큼, 미국 정부는 국채 발행을 늘려나갈 것이다. 미국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글로벌 국채 매입이 감소하고 있는 국면에서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되면, 국채금리가 치솟을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하고,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 더욱이, 국채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민간 기업

들이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부담스러워지는 등 상당히 불안한 요소들을 안고 확장 재정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

유동성의 시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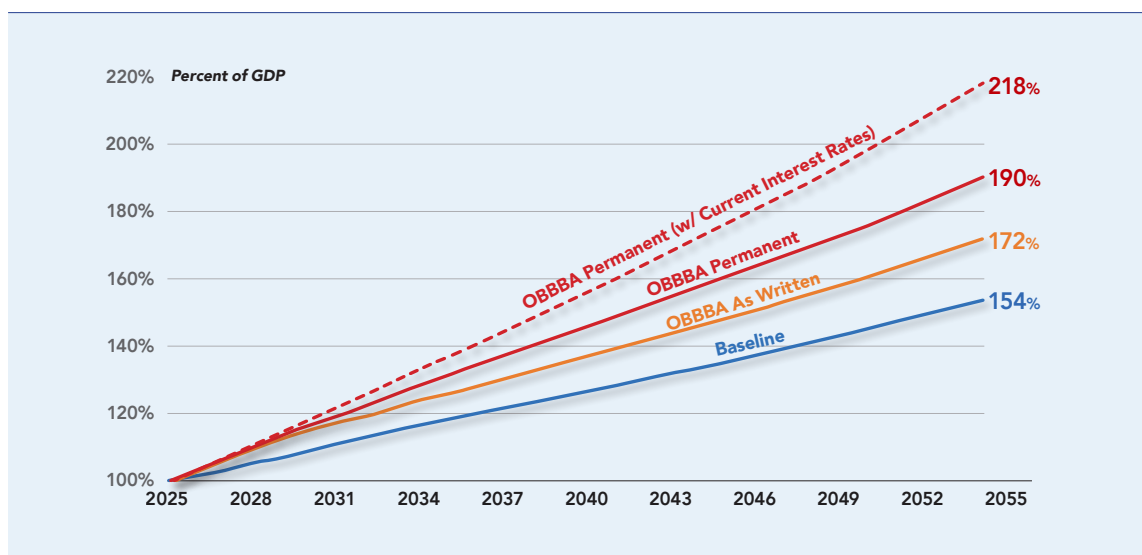
‘유동성의 힘’이 시장을 움직일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거론한 ‘저성장 고착화’는 실물경제를 가리킨 표현이다.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은 실물경제가 안 좋을 수록 유동성 효과가 발휘된다. 2026년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통화정책 기조도 2025년에 이어 신중한 금리 인하를 시도할 것이다. 더욱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돈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디베이스먼트(Debasement) 전략이다. 즉,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주식, 부동산, 코인 등 나머지 자산가치를 끌어올려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행보를 집중할 것이다.

‘유동성 파티’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 가계는 ‘돈의 이동’을 관찰해야 한다. 유동성이 집중적으로 시장에 공급된다는 것은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의 활력을 가져다줄을 의미한다. 돈의 이동은 곧 수요의 증가를 의미한다. 돈이 집중된다는 것은 곧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뜻한다. 유동성이 집중되는 영역과 섹터를 찾고, 유동성 파티를 즐겨야 할 때다. 다만, 파티에 취해 돌연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채권시장 불안 등 위험한 요소들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대세 하락장을 구분하여 이탈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미국의 국채 불안이 한국에 전이되는 일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계 국가들의 대출 금리, 채권 금리,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등이 미국 국채금리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국채 매도 스케줄을 점검하고, 기관들의 자산운용 면에서 국채 매입 규모와 시점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국채 금리가 등락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채권발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GDP 대비 미국 정부부채 비율 전망

자료 : CRFB(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조선의 재정 운용을 이끈 학문, 산학(算學)

조선은 500여 년간 안정적 정치 체제를 유지한 나라로, 법전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갖추었다. 재정 담당 최고 관청인 호조는 양전, 회계, 예산 편성 등 수학적 지식을 필요로 했고, 이를 위해 산학청을 두어 산원(算員)을 체계적으로 양성했다. 산원은 취재 시험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상명산법>, <양휘산법>, <산학계몽> 등의 교재로 공부했다. 조선의 관료들은 재정 운용 능력을 기본 소양으로 여겼으며, 관직에 오른 후에도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실무 능력을 키웠다.

박광일 역사작가, 여행이야기 대표

요즘 조금 달라지기는 했으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 조선에 관한 평가는 박한 편이다. 대한제국으로 이름이 바뀐 조선의 국권 피탈은 우리 역사 전체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극을 초래했다는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시선은 그 시기 정치를 담당했던 지식인, 위정자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개항 전후의 조선은 안으로 개혁에 실패하고 외세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적인 평가와 연결된다. 그러한 혐의는 조금씩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의 조선 역사의 대부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중세 이후 세계 역사에서 어떤 나라가 수백 년 동안이나 쇠퇴기일 수 있을까. 이는 현대의 시점에서 바라본 조선의 한계가 보였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더 나아가 조금 시선을 달리한다면 조선은 무려 500여 년 동안 안정적 정치 체제를 유지했던 나라이니 그 시스템의 배경이 궁금해진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가 조선은 건국 이후 법전을 기반으로 행정 체계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는 데 큰 관심을 둔 나라였다는 점이다. 조선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학문 영역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 드문 나

라였다. 조선이 공들여 만든 관리 선발을 겸한 교육 제도의 정비가 이를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나라의 행정 중심인 6조, 곧 이조, 호조, 예조, 형조, 병조, 공조는 행정기관이며 동시에 국가교육기관으로 조선이 필요로 했던 지식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호조의 업무와 산학의 필요성

이들 6조 가운데 하나인 호조는 조선시대 재정 담당 최고 관청이다. 그렇다면 호조에서 핵심 인제는 누가 될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호조의 업무를 알아보자. <경국대전> 등 법전에 정한 호조의 업무는 호적, 세금, 음식물과 재화 관련 일이다. 이를 담당할 실무 관청으로는 판적사와 회계사, 그리고 경비사 등이 있었다. 호구와 토지 조사, 조세, 부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판적사, 서울과 각 지방의 관청에 비축한 내용을 연도별로 파악하고 관리 교체 때 필요한 회계 문서인 해유(解由)를 발급하던 회계사,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출과 국외 지출 업무를 담당하던 경비사가 있다. 이러한 호조 안의 관청에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바로 수학이다. 양전, 회계, 예산 편성 등은 모두 수학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조선시대에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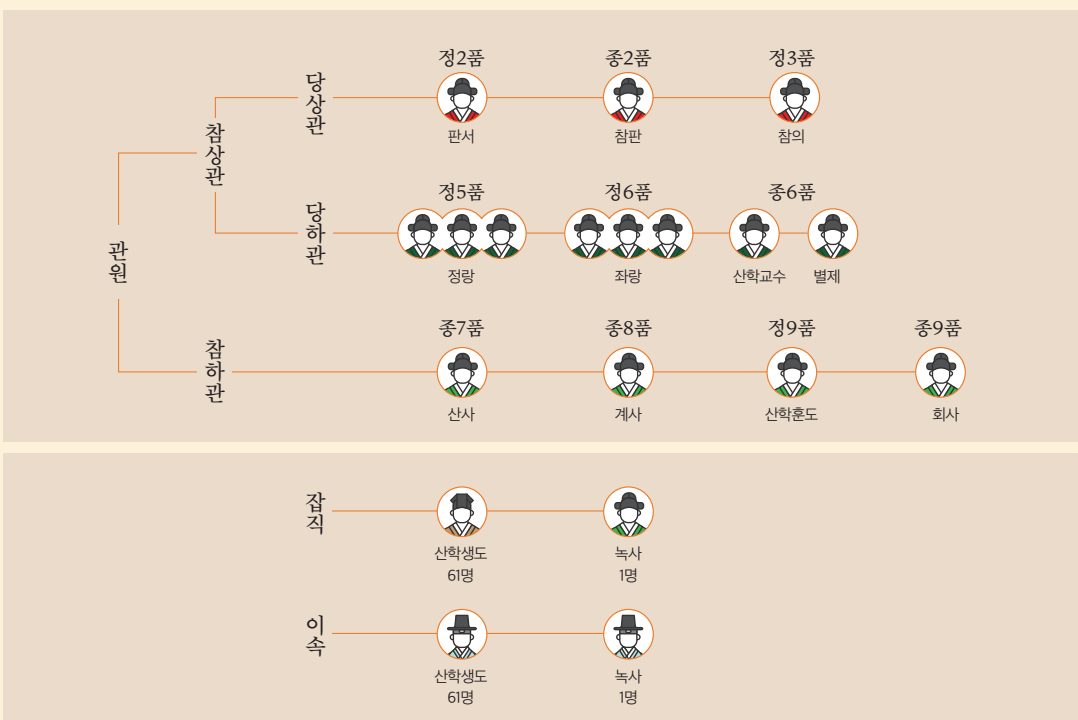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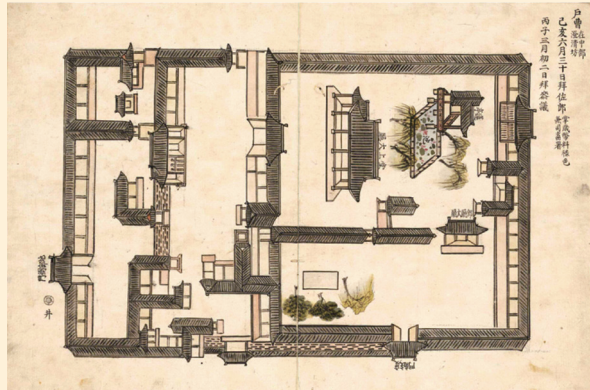


01



02

- 01 정조어진 산학 교육을 중시하고 <산학계몽>을 학습한 정조. 출처: 국립고궁박물관
- 02 <숙천제이도> 중 <호조> 호조 관청을 상세하게 그린 그림.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 03 호조의 관제(출처: <대전통편> 1785) 나라의 살림살이를 담당한 호조.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03



01 <경국대전> 호전(戶典) 부분 호조의 업무와 산원 선발 규정을 담은 <경국대전> 호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02 <산학계몽> 조선시대 산원들이 공부하던 수학 교재 <산학계몽>, 명나라 안눌의 <상명산법> 등이 대표적

수학을 산학(算學)이라고 했고 이를 담당하는 관리를 ‘산원’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호조로서는 실력을 갖춘 산원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만든 관청이 바로 ‘산학청’이다.

산학청과 산원의 역할

조선시대 전문 기술을 가르치던 이들은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던 현직 관리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산학청에서도 현직 관리가 교수 역할을 했다. 곧 산학청에는 생도들에게 산학을 가르치는 훈도와 산학교수와 같은 경력직 관료를 비롯해 산사, 계사, 회사 등 산학 전문 관료들이 있었다. 그리고 새롭게 산학청에 들어와 학습과 업무를 병행하던 산학생도 있었던 것이다. 이들을 일러 ‘산학산원’으로 불렀는데, 정조 이후에는 ‘주학계사’로 이름을 바꿨다. 계산할 때의 산(算)과 정조의 이름인 이산(李祘)의 ‘산’과 발음이 겹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발음이 다르고 뜻이 비슷한 글자로 바꾼 것이다. 이들 산원, 곧 수학을 담당하는 관리는 시간이 지나며 수요가 늘어나며 정원도 증가했다. <경국대전>에서는 15명 정원이었던 산원이 영조 때 편찬한 <속대전>에서는 61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실제 산원의 운용 규모를

보아도 종종, 인조 대의 산원은 56~60명을 오가던 산원의 규모도 조선 후기에 60명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산원이 늘어난 데에는 호조의 산학 관련 업무 외에도 다른 관청에서도 이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조 때 상황을 정리한 <만기요람>을 보면 산원은 선혜청, 균역청, 병조 등에서도 근무했다.

산원 선발과 취재 시험

그렇다면 이들을 선발하는 방법은 어땠을까. 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필요한 필수 학문 분야 열 개를 십학(十學)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유학과 무술(공문반과 무반의 양반)을 제외한 8개 영역을 잡학이라고 불렀다. 이 잡학에 속하는 8개 학문은 역학, 의학, 음양학, 산학, 율학, 화학(畫學), 도학, 악학이다. 이들 학문을 연마한 전문가들을 나라에서 선발할 때 중요한 영역의 인재는 과거를 통해 뽑았다. 조선시대 과거에는 문과, 무과, 생원진사시, 잡과가 있다. 문관이 되기 위해서는 문과를, 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무과를 치렀다. 생원, 진사시는 소과 시험이라고도 부르는데, 합격하면 ‘생원’ 혹은 ‘진사’라는 일종의 학위를 주는 시험이었다. 지금 수능 혹은 대학교 졸업시험과 비슷하다. 그런데 과거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한 것이 잡과였다. 잡과에는 역과, 의과, 음양과, 율과가 있었으니 이를 통해 통역관, 의원, 천문 및 명리학 전문가, 그리고 형조의 법률 담당 기술관료인 율관을 뽑았다. 이들 과거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를 식년시라 하며 합격정원이 문과 33명, 무과 28명, 생원 100명, 진사 100명, 잡과 46명으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산학 전문가인 산원은 과거가 아닌 관청에서 치르는 약식 시험인 취재를 통해 선발했다. 이러한 점에서 산학을 확대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양반 자제에게 산학 교육을 받게 하거나 지방관에게 산학을 익히도록 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산학 자체를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니었다.

산학 교재와 학습 내용

그렇다면 산원을 뽑는 취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경국대전>을 보면 1년에 4번 치르는 산학 취재의 시험은 다른 과거나 취재가 책의 내용을 암송하는 방식이었다면 산원 선발은 수학이라는 특수 영역이다 보니 필기시험 위주로 이뤄진 것이 다르다. 그리고 시험 준비하는 이들이 풀어야 할 교재가 나온다. 바로 <상명>, <계몽>, 그리고 <양휘>라는 교재이다. 제목을 줄여서 표기한 이들 교재는 곧 중국 명나라 때 안지제가 지은 <상명산법>, 그리고 원의 주세걸이 지은 <산학계몽>, 그리고 송의 양휘가 지은 <양휘산법>이다. 이들 교재는 <상명산법>이 수학의 기초라면 <양휘산법>과 <산학계몽>은 그 수준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일종의 심화 교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학 교재는 기본적으로 중국 한나라 때 수학책인 <구장산술>의 주제를 따르고 있다. <구장산술>은 아홉 가지 영역의 수학이라는 뜻을 가진 제목이다. 곧 땅의 면적을 계산하는 방전장, 곡물 교환에 필요한 환산을 계산한 속

미장, 분배에 관한 계산법인 쇠분장, 넓이를 구하거나 부피를 구하는 소광장, 축성이나 토목공사의 공정을 계산하는 상공장, 화물 수송이나 공물, 수확물 분배와 관련된 균수장, 과부족 상황에 따라 배분하는 영부족장, 연립방정식의 계산법인 방정장, 직각 삼각형의 문제를 다루는 구고장이 그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상명산법>에서는 구구단, 도량형 환산법, 곱하기와 나누기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양휘산법> 역시 곱셈과 나눗셈, 면적 구하기, 부정방정식, 원주율, 그리고 마방진 등을 정리했다. 가장 어려운 책인 <산학계몽>은 당시 수학과 관련하여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다. 곱셈이나 비례식,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것, 그리고 기하학과 이항계수, 이차방정식을 다루고 있다. 세종 역시 정인지에게 이 책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고 한다. 또 지방관은 물론 조선 후기 이익 등 지식인들도 <산학계몽>의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조선시대 지식인의 수학 관련 능력이 높게 평가받았으며 또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관료를 포함하여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재정 운용 능력이 기본적인 소양이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학습과 실무의 중요성

호조는 이러한 관료가 모인 곳이었다. 공부하지 않으면 실력을 유지할 수도,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이미 관료가 되었다고 공부를 그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해 매년 봄, 가을로 시험을 보아 승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호조를 비롯한 각 분야를 담당했던 관리들이 출세나 당파 정치에만 몰두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상의 업무에 주목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조선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아닐까.

백범 김구, ————— 자주독립을 떠받친 나라살림의 원칙

1월호에서 우리는 백범 김구가
꿈꾼 '사람이 먼저인 나라살림'의
철학을 살펴보았다. 그의 재정
인식은 단순한 경제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자주·평등·행복의 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 조건이었다.
이번 2월호에서는 그 연장선에서,
백범 김구가 말한 '자주독립'이
어떤 재정 원칙 위에서 성립될 수
있었는지를 짚어본다. 타력에 기대지
않는 재정 자립, 균형 있는 국가 운영,
그리고 국민을 키우는 재정. 백범의
자주독립론은 곧 나라가 스스로 서기
위한 재정 철학이었다.

정경환 동의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정치철학



서언

백범 김구의 정치 활동을 보면 그는 도저히 한 사람의 활동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파란만장(波瀾萬丈)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에서 가장 심한 격동의 시기로 평가되는 한말과 일제강점기¹ 및 해방정국에서 활동했던 백범의 73년의 성상(星霜)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보통사람의 경우 예외 없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출세하기를 바란다. 남들보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집을 원한다. 이것이 보통사람들의 평범한 모습이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백범 김구는 우리네 보통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삶을 보냈다. 우리는 그에게서 조국을 느끼고 민족을 느낀다. 그는 보통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다.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설혹 내 가족과 자식이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오직 민족이라는 대의를 위해야 한다고 하는 신념을 오롯이 실천하면서 살다가 갔다. 그는 어리석은 정도로 민족과 조국을 생각했다. 그에게 있어서 민족은 전설이자 신화 즉 그의 모든 것이었다.

그가 이처럼 그 오랜 세월 동안 올곧게, 정의롭게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무한한 애국심이었다. 그는 자기 나름의 확고부동한 사상과 철학을² 기초로 하여 활동하였다. 그의 사상과 철학은 정치, 경제, 문화, 역사, 과학, 국가, 종교 등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이 모든 백범 김구의 사상 체계의 근거는 바로 ‘자주독립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민족국가’란 글에서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 아보다가 죽는 일이다”고³ 언급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백범 김구의 자주독립론

백범의 재정철학을 한마디로 자주독립의 재정철학으로 규정할 때, 무엇보다 그가 주장했던 자주독립론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주독립론에서 자주와 독립은 서로 밀접한 상생 관계에 있다. 우선 자주는 사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행함”을⁴ 말하는 것으로 곧 “자기에 관한 일은 자기 힘으로 다스린다”는⁵ 것을 의미한다. 백범에게 있어서 자주는 자신의 모든 사상의 전제이자 방향을 의미한다.

1. ‘일제강점기’를 ‘일제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2. 인간 생각의 계보학을 정리하면 ‘의식 → 인식 → 관 → 론 → 사상 → 철학’ 순으로 확장되고 심화된다. 예를 들면 역사 분야에 대한 생각을 구조화해보면, 역사의식이 역사에 대한 생각의 출발이고 이보다 확장된 개념은 역사 인식이고 이어 역사관, 역사론, 역사사상, 역사철학 순으로 계층화가 형성된다.
3. 김구, 『백범일지』(서울: 교문사, 1980), p.290. ‘민족국가’ 중.
- 4, 5. 동아출판사편집부(편), 『동아 마스터 국어사전』(서울: 동아출판사, 1987), p.1819, p.1819.

백범에게 있어서 자주는 첫째, 타국(타자)의 간섭이나 개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하고 둘째, 스스로의 의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셋째, 그 생각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⁶ 독립은 한 나라(개인 포함)이 타국(혹은 타자)으로부터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자주와 독립은 일란성 쌍둥이처럼 매우 흡사한 용어처럼 보이지만 엄연한 차이점과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 양 용어 간의 구조를 보면 자주는 독립의 전제가 되는 용어이지 독립이 자주의 전제나 조건이 될 수 없다. 즉 독립이 독립으로서 완전한 의미를 갖게 하는 본질적 요소가 바로 ‘자주’인 것이다. 자주가 전제되지 않은 독립은 진정한 독립이라고 할 수 없다.

백범 김구의 자주독립의 재정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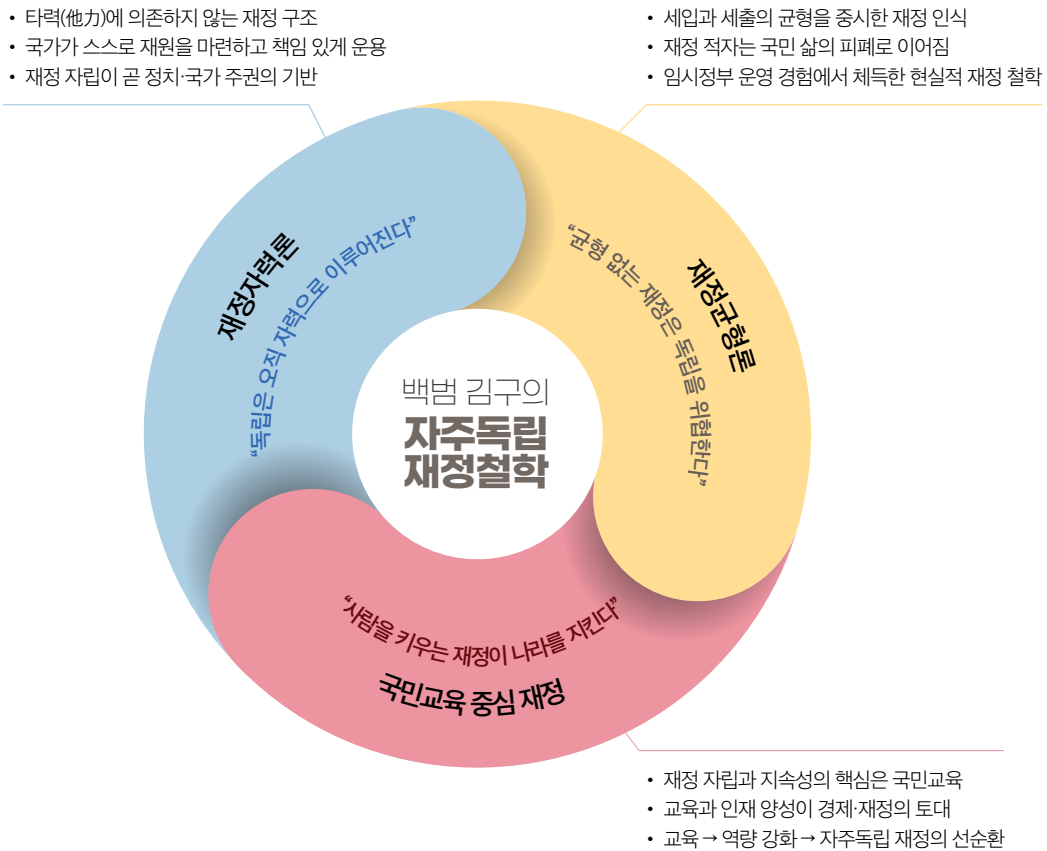
백범의 재정철학은 지난 호에서 자주지향적 재정론, 공생지향적 재정론 및 문화지향적 재정론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면 이달의 주제인 백범의 자주독립의 측면에서 본 재정철학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첫째, 그의 자주독립의 재정철학은 ‘재정자력론’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재정자력론은 그의 자주독립론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가 1946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독립은 타력(他力)에 의지하여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자력(自力)으로서 갖춘 독립이라야 비로소 민족의 안도(安堵)와 국가의 영원한 번영을 재래할 것이다”고⁷ 한 것은 재정정책에 있어서의 재정자력론 주창의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정부의 경제정책 중 재정정책은 통화정책과 더불어 국민의 삶과 국가의 경제발전과 직결되어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정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재정의 자립이고 이러한 재정의 자립은 자력적 재정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둘째, 백범의 재정철학은 ‘재정균형론’으로 규정할 수 있다. 백범 김구는 정부의 재정을 책임진 상해임시정부 내무장과 재무장을 지낼 때 재정균형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재정은 크게 세입, 세출 및 기금(보전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과 세출 간의 불균형은 재정적자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게 된다.

백범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정부의 집세가 30원, 심부름꾼 월급이 20원 미만이었으나 이것도 낼 힘이 없어서 집주인에게 여러 번 송사를 겪었다”는 언급과 “나는 임시정부 정청에서 자고 밥은 돈벌이 직업을 가진 동포의 집으로 이집 저집 돌아다니면서 얻어 먹었다”고⁸ 말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임시정부는 “사람도 돈도 들어오지 아니하여”⁹ 완전 재정적자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세입과 세출 간의 균형된 재정론은 결코 이론만이 아니라 그의 생생한 정부 운영의 경험에 나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백범의 재정철학은 국민교육론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정의 자립도와 균형을 높일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국민교육론이 있다. 백범이 “지식이 결여되고 애국심



이 빈약한 이 국민으로 하여금 나라가 곧 제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나라를 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¹⁰라고 언급한 대목은 바로 국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국민교육을 통해 경제발전의 버팀목이 될 나라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백범이 말하는 자주독립적인 재정론의 핵심적 요소임을 깨닫게 된다.

“나는 이에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저마다 배우고 사람마다 가르치는 것임을 깨달았다”¹¹ 백범의 말은 국민교육을 통한 안정되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철학을 역설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6. 정경환, 『백범김구 연구 2 : 정치사상의 재조명』(부산: 도서출판 이경, 2005), pp.200-201.

7. 김구, “자력으로 조국 찾기,” 『나라사랑』 제21집(의술회, 1975), p.181.

8. 김구, 7의 책, p.229.

9. 7의 책, p.228.

10. 7의 책, p.148.

11. 7의 책, p.194.

재정의 본질과 인간 행동의 법칙을 읽다 “공공재정의 기초와 경제 심리의 불변성, 재정 이해의 출발점”

『기초부터 쉽게 풀어 쓴 공공재정 이야기』

강해석 저 | 부분과 전체(2025년)

이 책은

예산, 결산, 조세,
지방재정 등
공공재정의
전 영역을
쉬운 언어와 사례로
풀어낸
재정 입문서

공공재정 분야에서 다년간 실무와 연구를 해온 저자가 예산·결산·조세·지방재정 등 재정의 모든 영역을 일반 시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낸 입문서다. 박선춘((주)씨지인사이드 대표), 주희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 이종구(국회 예산정책처 행정예산분석과장), 최명순(채무자회생법학회 상임이사), 임희연(경기도의회 정책지원팀장) 등 재정 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쳐 정확성과 실용성을 확보했다. 정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지방재정은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등 재정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작동 원리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공무원, 지방의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재정 업무에 관여하거나 재정 감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 복잡한 재정 용어와 제도를 실생활 사례와 연결하여 설명함으로써, 일반 독자도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재정정책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공재정 이해 핵심 포인트

-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정부가 어떻게 1년 예산을 계획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집행하는지 그 전 과정을 이해한다.
- **세금의 종류와 용도:**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각 세목의 특징, 세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파악한다.
- **지방재정의 구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관계,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역할을 이해한다.

기초부터
쉽게 풀어 쓴

AI 재정칼럼

공공재정
이야기

강해석 지음



아래의 재정 이야기, 쉬운 말로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회를 이루는 지도(지도)다.
기초·중요부터 자세히 살펴, 쉽게 배우고 싶어 읽는다는 마음으로 재정까지 알아야 하고,
현물과 현금의 차이(현물)도 누구나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재정 안내서(안내서)다.

부분과 전체

2월은 새해 예산 집행이 본격화되며, 재정정책이 국민 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예산과 재정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동시에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과 행동 패턴이다. 공공재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경제 의사결정의 불변 법칙을 파악하는 두 권의 필독서를 추천한다.



『불변의 법칙』

모건 하우절 저 | 이수경 역 | 서삼독 (2024년)

『돈의 심리학』으로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모건 하우절이 3년 만에 내놓은 신작으로, 급변하는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주목한다. 저자는 수백 년 전에도 유효했고 수백 년 후에도 여전히 유효할 23가지 불변의 법칙을 역사적 사례와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낸다. 탐욕, 두려움, 낙관주의, 비관주의 등 인간의 기본 감정과 행동 패턴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으며, 이것이 경제 위기, 투자 버블, 정책 실패를 반복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입안자나 경제를 분석하는 전문가에게 이 책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아무리 정교한 경제 모델과 데이터를 갖추더라도, 결국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심리와 행동이기 때문이다.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 위기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찾아오는 이유, 합리적 판단이 왜 어려운지 등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견고한 정책 설계가 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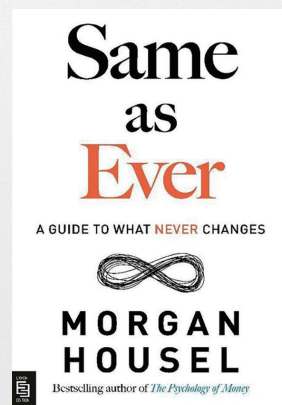
재정정책과 경제심리 연결 포인트

- **인간 본성의 불변성:** 경제 주체들의 심리와 행동은 시대를 초월하여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이를 이해해야 효과적인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
- **리스크와 불확실성:**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언제나 존재하며, 재정정책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여유와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
-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원칙에 기반한 정책이 더 지속가능하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
『돈의 심리학』 저자가
전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인간 본성과
경제 행동에 관한
23가지 법칙



2025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행사



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10일(화) 오전 10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이남구 감사원 감사위원, 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597.9조 원, 총세출은 591.0조 원이며,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9조 원에서 이월액 3.7조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2조 원으로 확정되었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마감행사 개요

- **일시·장소** 2026. 2. 10.(화) / 한국재정정보원
- **참 석**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 이남구 감사원 감사위원, 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등
- **주요 내용** dBrain+ 시스템 마감, 세입·세출액, 세계잉여금 등 주요 결산통계 발표

한국재정정보원, NH농협은행과 설 명절 온정 담은 사회공헌 활동 전개



한국재정정보원(원장 윤석호)·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설 명절을 맞아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및 남산원을 찾아 후원품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윤석호 원장은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NH농협은행과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지역사회 이웃들이 따뜻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후원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재정정보원과 NH농협은행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협약'을 통해 적립한 재원으로 마련됐다. 윤석호 원장은 "함께해 준 NH농협은행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재정정보원과 NH농협은행은 2021년부터 복지관 나눔 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함께 실천해 오고 있다.

애독자 코너

• 2026.02 •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나라재정』은
항상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WOW



찾아라~~ 한국재정정보원 숨은 정보

Q. **국민 누구나** 우리나라의 예산·결산·재정통계 등 재정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재정 정보 공개 포털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 ① 재정정보분석센터
- ② e나라도움
- ③ 열린재정
- ④ 나라장터



힌트!

우측 QR코드로 한국재정정보원 블로그에 접속해 정답을 찾아보세요.

우측 QR코드로 접속해 정답을 응모해 주세요.

*응모기간 2025.2.25. ~ 3.16.

★ 지난해 정답: ① dBrain+

★ 지난해 퀴즈 당첨자

010-****-7262 010-****-9416
010-****-6499 010-****-9688 010-****-4120



Q ♥

#나라재정#dBrain+

응모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월간『나라재정』에

숨겨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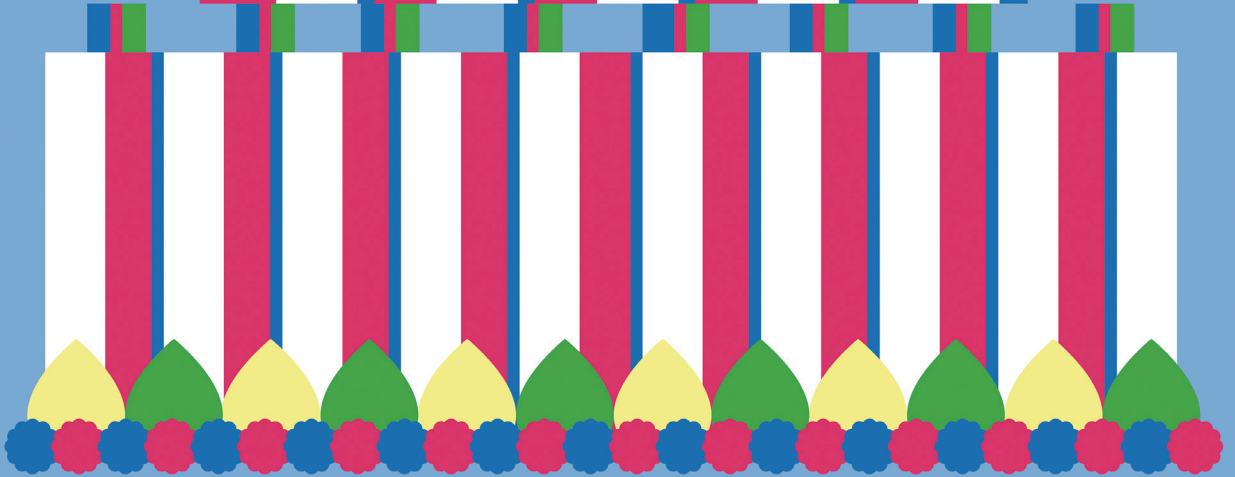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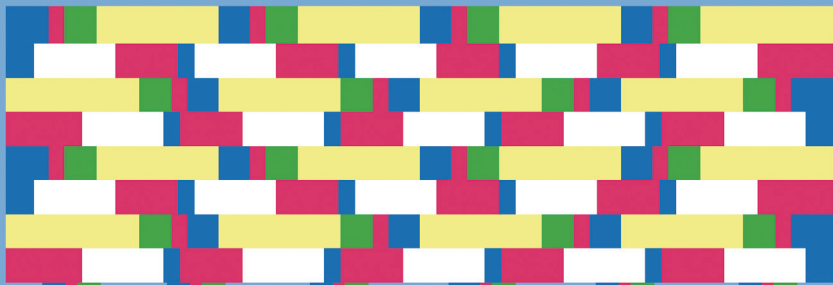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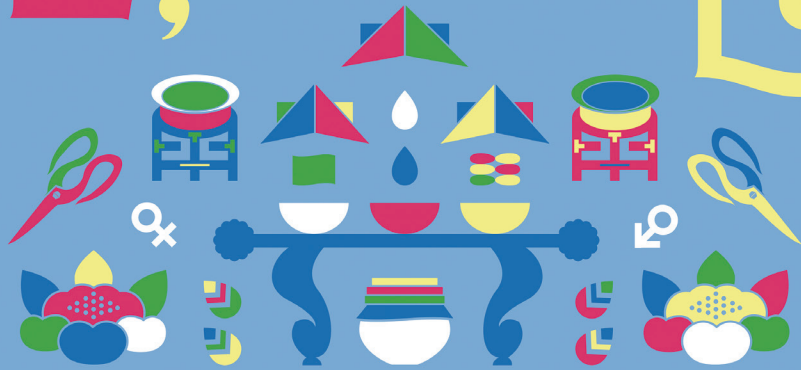
애독자 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 사모의자 * 고니, 니

2025.
12.3. ^수

—
2026.
5.10. ^일

국립
민속
박물관
기획
전시실 I



HAPPY BIRTH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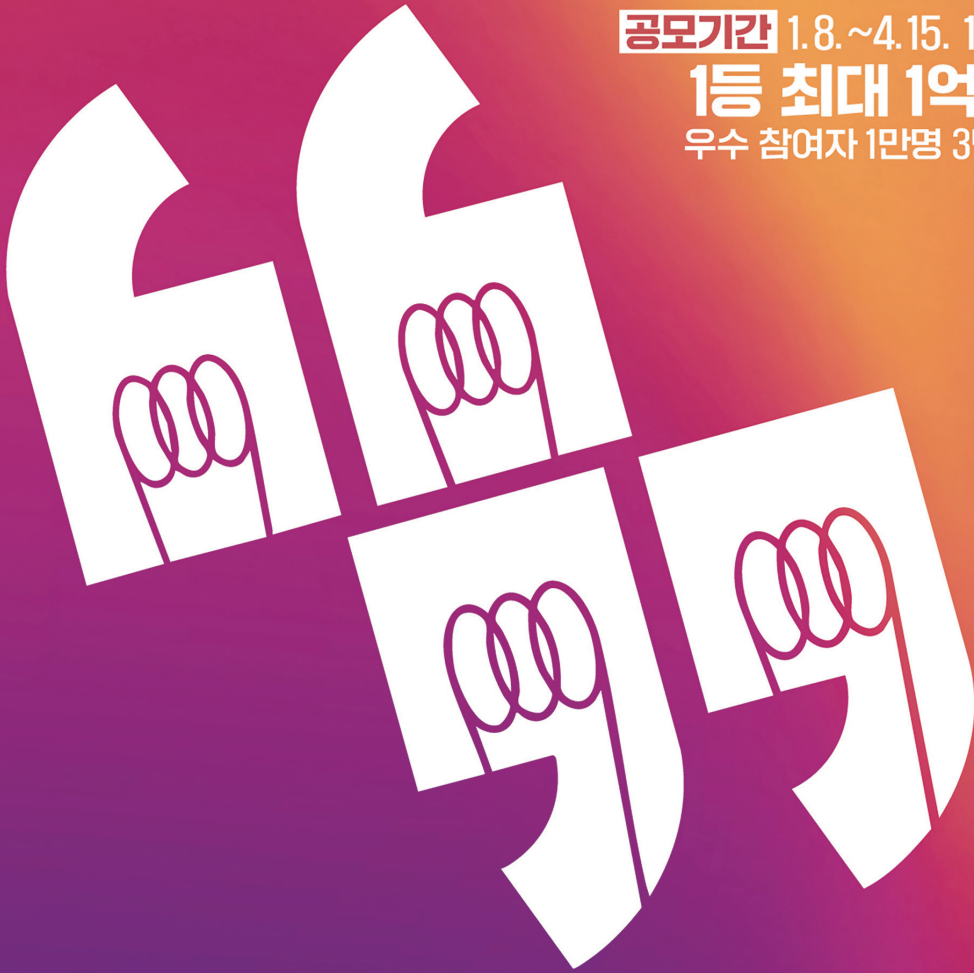
당신의 생각으로 빛나는 대한민국



공모기간 1.8.~4.15. 18시

1등 최대 1억원

우수 참여자 1만명 3만원



From Idea to Economy

모두의 아이디어

